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민주노총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 현황과 전망

2012. 9.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발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무엇을 남겼나?’	1
[발제] 비정규 전략조직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	20
[토론] 80년대 민주노조 운동에서...	51
[토론] 비정규 전략조직화와 조직문화 혁신	53
[토론] 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57
[참조]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추진계획	27
[별첨]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	61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문제의식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노동운동진영의 주된 관심 사항 중 하나였음. 특히 민주노총의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실제 22억 기금)을 통한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진행은 그간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음. 그렇다면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평가 결과여부는 3기 전략조직화 사업 진행 여부를 논의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풀어 나가기 위해 탐색적 차원에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를 목적으로 기술되었음. 물론 주된 문제의식은 향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효과적인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음.¹⁾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아래의 물음은 필자가 지난 2009년 1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토론회 발제문(2009.5)에서도 동일하게 던진 질문임.]

- ① 첫째,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었나?
- ② 둘째, 만약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혹자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혹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③ 셋째, 끝으로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 시기, 노동운동진영에서 검토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이 글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와 과제』(김종진, 박종식, 이승우, 이주환, 김경란, 2012) 보고서(하반기 발간 예정)의 초안을 필자가 토론회 발제를 위해 수정 보완한 것임.

2. 노동조합의 전략조직화 사업 시각과 접근법

□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

—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은 영미권 나라들의 노조 운동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음. 1990년대 초 서구의 노동조합은 단순히 내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을 넘어서서, 노동운동의 거듭나기를 위한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부흥, 거듭나기) 방안의 일환으로 조직화 전략을 고민하게 되었음. 특히 노조 조직화 전략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자원동원)하여 노동조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음.

—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노조 조직화 전략은 조합원 확대를 통해 작업장 수준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동원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힘(power)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특히 서구에서는 조직화 모델 전략이 제기(물론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형태로 조직 전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었음.²⁾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선택된 조직화 모델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노동자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였음(Bronfenbrenner, 1998; Confield & Mcammon, 2003; Cregan, 2005; Frege & Kelly, 2003; Fiorito, 1995; Fairbrother, 2003; Kelly & Waddington & Heery, 2002; Hurd & Milkman & Turner, 2002; Herry & Adler, 2004; Turner 2005; Schenk, 2003)

□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

— 노동조합의 조직화 모델은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방향이었던 구성원 개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서비스 모델을 지양하고,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태도에 기초한 조직화 방식임. 조직화 사업은 주변화된 미조직 노동자들과 여성 및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임. 이러한 전략을 채용한 미국에서는 저임금 노동, 서비스 부문, 비조합원 여성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해서, 작업장의 경제적 이슈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조합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이었음.

[그림 1]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 선택 배경과 전략 조직화의 핵심 요소

2) 조직화 모델은 미국 노총(AFL-CIO)이 조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것. 조직화 모델은 1990년대 초 미국 노총 산하의 전미서비스노조(SEIU) 등에서 제안된 후, 1995년에는 미국 노총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 이후 조직화 모델은 호주, 영국 등 영미권의 노조운동에 전파되었으며,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검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조직화 모델 선택이 꼭 조직화의 성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으며, 노조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과 조직 특성 등이 조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내적(자원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를 둘러싼 기존 조합원들의 조직화 방침에 대한 저항, 새로운 조직화 경향에 대해 회의적인 혹은 반대 입장 등)이고, 외적(조직 활동에서 노동조합 간의 경쟁, 미조직 분야에 대한 사용자측의 저항 등)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음.

□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

<표 1>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 주요 방침 흐름

시기	대대	주요 결정	결정 내용
2003년	28차 정기 대대	5개년 사업계획 수립	5대 핵심부문 조직화, 조직문화환경 개선과 조직화 전략 캠페인, 전국적 사업체계-시스템 구축과 강화
2005년	33차 정기 대대	1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본 방향 수립	인력과 재정 집중, 핵심부문 설정, 전략과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조직활동가 양성체계(조직활동가) 및 50억 기금 조성
2009년	45차 정기 대대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방향 수립	1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조 수립, 전략조직화 사업의 혁신안 마련 및 비정규·미조직·이주노동자사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종합목표 제출
2010년	49차 정기 대대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세부 방안 마련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조직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상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전략은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민주노총의 미조직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은 2005년 50억 기금 결의시기로 볼 수 있음. 당시 민주노총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목적으로 50억 기금(약 22억 모금)을 모금했고, 1기 사업을 완료하고 2기 전략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임. 사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이 진행된 지난 7년은 총연맹과

가맹 산하조직 모두 전략조직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일부 산별연맹의 경우 독자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음.

- 한편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출발부터 기존 조직의 내부 주체의 역할 중 하나로 ‘조직문화혁신’이 제기되었음. 실제로 민주노총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 ‘핵심 대상을 설정하여,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며, 이런 사업은 아래로부터의 연대, 새로운 주체형성을 통한 운동정체성 회복,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문화혁신사업으로서의 의의를 지님.

- 때문에 민주노총은 당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과 방침으로 ① 핵심 조직화 대상 설정, ②인력과 재정의 집중 투입(1기 조직활동가 양성배치와 조직화기금 조성 → 2기 전담 기구 및 부서), ③부서, 특위, 사업단 구성 및 사업비 책정 등을 통한 사업체계 구축, ④관련 강령 및 규약 제개정, 조합원 일상교육과 홍보, 비정규직 할당제 등의 조직문화환경 개선, ⑤비정규직 노동권의 사회 의제화(법제도 개선), ⑥시민사회와의 연대 등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 등을 각급 조직에서 이행하도록 했음(민주노총 사업보고, 2004).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방향은 2009년 1월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음. 총연맹은 4대 사업과제로 조직문화혁신사업의 일환인 △선언과 강령 개정,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사업,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확대개편 사업, △비정규직 사회적연대 강화사업을 설정했음. 더불어 1기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기초를 수립하고, 전략조직화 사업 혁신안 마련 및 비정규미조직·이주노동자 사업 등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했음(2010년 1월 49차 정기대의원대회)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화두는 1기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되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조직화,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일상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두 축으로 설정했음. 민주노총은 조직문화혁신운동을 통해 총연맹 전체가 미조직 비정규 사업의 일상화를 추진하며, 비정규운동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중소영세(여성, 청년, 이주, 장애인) 노동자 등의 영역에 자원과 역량을 배치하고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한 것임(2010년 10월 50차 임시대의원대회). 당시 민주노총 19개 가맹 산하 조직은 전략조직화 사업의 충실한 집행을 결의하고,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

3.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한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³⁾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제대로 준비-실행되었나?

① 2기 전략조직화 평가 결과

- 전략조직화 사업 전체 사업 과정을 보면 ‘조직논의 대상과약’(54.17점), ‘법제도&의제화’(31.25점)의 2개 항목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 이는 해당 핵심사업 조직에서 향후 사업의 주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성을 시사. 또한 애초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중소기업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의 핵심 사업인 ‘지역 공단’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거나, 수행한 지역본부의 사업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 이에 총연맹 및 산하 조직 모두 지역 공단 사업이 왜 성공적이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조직 내부의 다차원적이면서도 면밀한 평가 필요.

<표 2> 민주노총 사업 영역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조직구분	전략 조직화 사업 종합평가	2011년 사업 기초방향 & 구체화						
		계	2011년 사업기초방향			2011년 사업 구체화		
			소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52.50	65.63	62.50	50.00	75.00	68.75	75.00	62.50
지원사업(지역본부)	32.71	37.50	41.67	31.25	45.00	33.33	31.25	30.00
지원사업(산별연맹)	63.63	75.00	72.50	50.00	87.50	77.50	85.00	58.33
평균	52.13	61.88	61.25	43.18	69.23	62.50	63.64	48.08

<표 3> 민주노총 사업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조직구분	2011년 집행체계구축과 사업										
	계	2011년 가맹산하조직 공동기획사업			2011년 타조직과의 공동협의구조사업			2011년 정기적인 사업집행			사 업 인 력 중 복 해 결 (하반기)
		소계	상 반기	하 반기	소계	상 반기	하 반기	소계	상 반기	하 반기	
핵심사업	59.38	56.25	75.00	37.50	56.25	75.00	37.50	75.00	87.50	62.50	50.00
지원사업(지역본부)	38.54	33.33	43.75	15.00	50.00	50.00	50.00	45.83	50.00	45.00	25.00
지원사업(산별연맹)	53.13	30.00	40.00	16.67	65.00	70.00	50.00	67.50	65.00	58.33	41.67
평균	50.00	36.25	47.73	19.23	58.75	63.64	48.08	62.50	63.64	53.85	36.54

3)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핵심사업(3년: 2011~2013)과 지원사업(1년: 2011)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일부 성과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2012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일정한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2011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는 각 급 조직의 자료(전략조직화 사업 분기별 사업 보고서)와 각급 조직 기초 자료(대대, 중앙위, 내부 회의자료), 담당자 면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음. 전략조직화 사업의 계량화된 평가는 필자가 민주노총 미비특위에서 합의된 평가 기준(항목)을 토대로 계수화(점수 : 0점 ~100점)한 것임.

② 세부 항목별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 5개 범주(13개 항목별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세부 내용은 △사업기조방향&구체성, △집행체계 구축&사업, △조직논의&대상과약, △법제도의제화, △물적자원확보와 집행으로 구분.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종합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2.13점(상반기 54.62점) 정도.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결과 주요 항목 중 △법제도 및 의제화(46.25점), △물적자원 확보(44.58점) 항목은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민주노총 사업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결과

조직구분	2011년 조직논의&참여&조직대상과약									
	계	2011년 단사조합원 참여도			2011년 교육&간담회			2011년 조직대상과약 &연구조사		
		소계	상 반 기	하 반 기	소계	상 반 기	하 반 기	소계	상 반 기	하 반 기
핵심사업	54.17	18.75	25.00	12.50	75.00	75.00	75.00	68.75	75.00	62.50
지원사업(지역본부)	27.78	0.00	0.00	0.00	33.33	50.00	30.00	50.00	50.00	25.00
지원사업(산별연맹)	77.50	70.00	80.00	50.00	77.50	90.00	54.17	85.00	100.0	58.33
평균	57.92	38.75	40.91	25.00	63.75	72.73	48.08	71.25	77.27	46.15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각 평가 내용

- 첫째, '사업기조방향&구체성'은 61.88점(상반기 53.4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기조방향(61.25점, 상반기 63.63점)이 △사업기조 구체화(62.50점, 상반기 43.18점)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집행체계 구축&사업'은 50점(상반기 58.3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적 사업집행 62.50점(상반기 63.63점), △타 조직과의 공동협업구조 58.75점(상반기 63.63점), △사업 전담자 인력중복해결 36.53점(하반기 신설 항목), △가맹산하조직공동기획 36.25점(상반기 47.72점) 순.

- 셋째, '조직논의&대상과약'은 57.91점(63.63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대상연구실태 조사 71.25점(상반기 77.27점), △교육&간담회 진행 63.75점(상반기 72.72점), △단위노조 조합원 참여 38.75점(상반기 40.90점) 순.

- 넷째, '법제도&의제화'는 46.25점(상반기 47.72점)에 불과.

- 다섯째, '물적자원확보와 집행'은 44.58점(상반기 50점)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 53.75점(상반기 50점), △조직 인력투여 36.53점(하반기 신설 항목), △조직 예산

투여 : 28.84점(하반기 신설 항목) 등의 순.

<표 5> 민주노총 사업별 전략조직화 2기 사업 평가

조직구분	2011년 법제도&의제화			2011년 물적자원확보&인력&예산					
				계	예산집행			조직 자체 예산 투여 (하반기)	조직 인력 투여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소계	상반기	하반기		
핵심사업	31.25	37.50	25.00	52.08	56.25	37.50	75.00	50.00	50.00
지원사업(지역본부)	29.17	18.75	20.00	30.56	50.00	56.25	40.00	20.00	15.00
지원사업(산별연맹)	62.50	75.00	41.67	50.00	55.00	50.00	50.00	29.17	50.00
평균	46.25	47.73	30.77	44.58	53.75	50.00	50.00	28.85	36.54

□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곳) 평가

－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은 서울지역본부의 ‘서울남부(가산디지털산업단지) 조직화 사업’과 공공운수노조의 ‘인천국제공항 조직화 사업’임. 2011년 진행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곳) 평가 결과는 54.17점(상반기: 55점)으로, ‘산별연맹의 지원사업’ 77.50점(상반기 : 68.16점)과 ‘지역본부의 지원사업’ 27.78점(상반기: 54.62점)과 비교하면, 핵심사업(서울남부, 공항지역)은 산별연맹의 지원사업에 비해 핵심 사업은 낮은 평가.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지원사업은 주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었음. 2기 전략조직화 지원사업 중 산별연맹 사업(6개 조직)은 평균 63.63 점으로 지역본부 사업(6개 조직 32.17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평가.

<표 6>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2011년, 단위: 0~100점 만점)

산하조직	평가 점수	가맹조직	평가 점수
지역본부A	50.21점	산별연맹A	54.79점
지역본부B	18.54점	산별연맹B	65.00점
지역본부C	28.54점	산별연맹C	83.96점
지역본부D	51.04점	산별연맹D	51.88점
* 3개 지역본부(경남, 대구, 경북)와 1개 산별연맹(사무금융)의 경우 자료 미제출, 사업 미진척으로 평가에서 제외.		산별연맹E	67.29점
		산별연맹F	57.92점

2) 민주노총 총연맹과 각급 조직의 사업 이행 정도는?4)

□ 조직화 대상 설정(targeting)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중소기업, 여성, 이주, 청년 등으로 조직화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총연맹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본 의미로써 설정했던 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며, 조직문화혁신을 이뤄내고자 했던 방향으로 한걸음 진전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2기 전략조직화 선정(2010년 9월) 당시 언급되었던 몇몇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음. 일부 조직의 경우 사업이 절반(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년 3월까지도 예산 신청조차 못했음(예: 공공 공항, 서울 은평, 공공 서비스, 대구 공단, 화섬, 경기, 경남, 경북 등). 또한 사무금융의 경우 내부 사정(신경분리: 농협)을 이유로 전략조직화 사업 신청을 철회한 이후 재신청(콜센터) 이후 연구조사사업 정도에 그친 사례도 있으며, 2기 전략 조직화 사업 평가 자료를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조직(대구)들도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총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 때문. 당시 2010년 9월 2기 전략 조직화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위원 및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과 대상 선정의 문제의식이 제시되었음에도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실제로 전략조직화 핵심사업(2개)을 제외한 신청 조직 거의 모든 조직에게 '사업비 지원'이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기준(조직 내 합리성)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임.

-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개 조직은 사업 중도 포기(경남), 3개 조직은 사업변경(사무금융, 경북, 대구), 5개 조직은 사업 성과가 미진(서울 남부, 인천, 경기, 은평, 보건)한 곳들임. 이는 1기 전략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성찰적 태도에서 출발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목적과 취지(사업기조와 방향성)와 달리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반영. 특히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예산 신청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실질적인 사업은 하반기에 되어서야 진행되었음. 2012년 상반기로 일부 사업이 진행되는 몇몇 조직들에서도 사업비 집행율은 높지 않은 상황.

4)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각급 조직의 이행 정도를 다루었음.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내용은 대의원대회와 미비특위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했음.

<표 7>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이행 및 변화 여부

조직 영역	가맹산하 조직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대상과 목표	
		2010년 9월 사업 제출 시기 사업 대상	2012년 9월 기준 사업 대상
핵심 사업	서울 남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지역 공단 : 중소기업(제조업, IT, 사무, 유통 등)	구로지역 조직화 사업 진행 [성과 미비]
	공공 운수	인천공항 지역	인천공항 간접고용 조직화 진행[성과]
		부산신항만 지역	공항사업으로 전환 권고
지역 본부 사업	경기	안산시흥 공단	안산시흥지역 공단 조직화 미비
	인천	인천지역 지자체 직고-간고 비정규	지자체 비정규 조직화 미비
		지자체 산하 기관, 민간위탁	진행 無
	경남	김해-사천공단 지역	학교비정규직 자체 사업으로 전환
		간병요양보호사 지자체 계약직 및 민간위탁 조직	[2011년 자체 조직 사업 계획안]
	서울 은평	은평 지역 중소기업사업장(중소병의원, 요양간 병, 음식숙박, 보육, 환경미화, 유통,시설경 등)	지역중소영세 사업장 진행 [성과 미비]
	대구	중소영세, 공단, 산별연맹 연동 사업	사업 진행 無 [중소영세공단]
	경북	- 지역 공단 및 비정규(지자체 및 대학교, 사내 하청 청소용역) - 지역 대기업(포스코), 구미(삼성, LG)	3분기 사업 시작 [조직대상 : 학비, 공단 불특정]
산별 연맹 사업	건설	펄프카	타설 조직화 사업 진행[성과]
		토목, 플랜트	[2010년 자체 조직 사업 계획안]
	서비스	백화점 판매직	백화점 및 면세점 조직화 확대[성과]
	보건	예비노동자(대학생)	진행 미비
	공공서비스	서울 대학 청소노동	진행 중[일부 성과]
		전북 간병요양, 의료연대 간병요양	[2010년 자체 조직사업 계획안]
	화석	경남 양산 웅상공단	진행 중[지역연대사업]
	사무금융	NH직고 비정규, 보험모집인, 채권추심	사업 포기 의사 전달 이후 → 콜센터 연구조사 작업 완료

□ 인력과 재정 집중

가. 50억 기금과 재정

<표 8> 민주노총 50억 전략 조직화 기금 내역(2006.1.1~2011.12)

수입		지출		잔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기금	2,108,147,686	1기 전략조직화	1,109,626,092		
이자	113,784,709	2기 전략조직화	420,497,117	총수입	2,221,932,395
		이주노동자전략조직화	41,040,110	총지출	1,588,807,503
총계	2,221,932,395	총계	1,571,163,319	총계	546,821,622

－ 민주노총이 추진한 50억 기금 사업은 22억 정도 모금하여 목표액 50% 달성에도 못 미쳤음. 2011년 말 기준으로 50억 기금의 잔액은 5억 4천만원 정도이며, 2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9월경에는 기금 고갈이 예상. 전략조직화 기금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직 발생.

－ 한편 민주노총은 2003년 2월 28차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채용의 재배치 원칙을 확인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2003년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2007년 30%를 목표로 세웠음.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 및 각급 조직의 미조직 비정규사업비 예산 비중은 약 5.6%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물론 조직사업비 예산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비 비중 대비 10%를 상회하지만 그동안 1,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비용이 50억 기금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전제하면 총연맹이나 각급 조직은 전략적으로 미비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지 못했음.

<표 9> 민주노총 조직화 자원 배분 현황(사업비 대비 미비 사업비 예산 비중, 2008~2011)

	평균	총연맹	금속	보건	공공	서비스
2008년	7.28	5.4	0.71	0.31	12	18
2009년	5.05	4.0	0.6	2.58	5.2	12.9
2010년	4.58	8.4	0.54	3.59	7.6	2.8
2011년	5.5	8.2	0.66	4.65	6.3	7.7
4년 평균	5.6	6.5	0.62	2.78	7.77	10.35

* 주 : 각급 조직의 '미조직 사업비'는 '조직사업비'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임. 금속노조의 지회 미비사업비 제외

* 출처 : 각 조직별 년도별 대의원 대회 자료집 재구성

□ 사업체계 구축

－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사업체계 구축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골간임. 사업체계 구축은 보통 사업단이나 전담부서, 담당인력, 미비특별위원회 및 연대단위 등을 구성 등인데,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거의 대부분 불안정한 상황임. 특히 일부 조직의 경우 자체 사무처나 집행부 수준에서 사업단을 구성한 곳들이 있음. 그나마 사업체계를 구축한 곳들도 전담인력 확보, 미비특별위원회 및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도 있음.

－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차원의 미비 사업 담당 주체(미조직비정규실)와 시스템 또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격심한 변동을 거쳐 왔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음[*조직 내부의 담당부서 축소, 역할과 업무

영역 축소,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이로 인해 전략조직화에 대한 위상 약화와 사업의 책임성과 권위가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

<표 10> 민주노총 총연맹 미비 사업 시스템 변화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위원장	4기			5기			6기		
	이수호	전재환 (비대위)	조준호 (보궐)	이석행	이석행	임성규 (보궐)	김영훈	김영훈	김영훈
사업 체계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사업 실	비정규 조직센터 조직쟁의실	비정규 조직실	비정규 조직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미조직 비정규실
	4명	4명	2명 2명	4명	4명	4명	5명	6명	7명
사업 담당	주진우(실장) 김진억 김혁 임진희	주진우(실장) 김진억 김혁 임진희	기형노 (소장) 박주승 (비정규업무) 석권호 박민	(비정규업무) 김동우 석권호 홍순광 박수경	(비정규업무) 김동우 석권호 홍순광 박수경	(비정규업무) 박유순 홍순광 박재석 박수경	이승철(실장) 김정근 박유순 석권호 박수경	이정호(실장) 기형노 이수미 채근식 석권호 홍순광	기형노(실장) 채근식 석권호 홍순광 이양수 이수미

* 출처: 민주노총 각 연도별 대의원 자료 재구성(각 년 1월 기준)

- 한편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총괄하는 기본 체계는 미조직비정규 특별위원회(미비특위)로 볼 수 있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미비특위는 가맹·산하조직의 미비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미조직 비정규 사업을 논의·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표 1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민주노총 미비특위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미조직·비정규 사업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논의·의결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

<표 11>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미조직특위 위원 현황 흐름

가맹·산하	2004.12		2009.12		2011.12	
	특위 구성	특위장	특위장	특위위원	특위장	특위위원
건설	현장사업위	이태영(수석부위)	김금철(수석부위)	현석호(조직국장)	이영철(사무처장)	현석호(조직국장)
공공 운수	비정규특위	김태진(부위원장)	이장우(부위원장)	공공운수 이미경(조직국장)		민길숙(미비국장)
		화물통준위 이상배(대전지부장)		공공노조 유남미(미비실장) 운수노조 심동진(사무국장)		
공무원						
금속	비정규특위	이우봉(부위원장)	이시욱(부위원장)	이상우(비정규국장)	최정명(부위원장)	송보석(미비실장)
대학				김일곤(조직국장)		손창원(조직국장)
보건의료	미조직노동자위	홍명옥(부위원장)	정해선(미비위원장)	나영명(조직2실장)	정해선(미비위원장)	김형식(조직2실장)
민주일반			한상학(부위원장)	권용희(조직국장)	최봉현(부위원장)	주훈(미조직부장)
비정규교수						김상목(사무차장)
사무금융	비정규직특별위	김경진(부위원장)	이두현(부위원장)	김준기(조직부국장)	마화용(부위원장)	이영일(조직국장)

서비스	비정규특위	최동재(프레아cc위)	이경옥(미비특위장)	김성근(조직실장)	이경옥(미비특위장)	백은옥(조직국장)
언론		박병완(부위원장)	고현호(미비특위장)	김성근(조직실장)	고현호(미비특위장)	
여성			이찬배(위원장)		이찬배(위원장)	
전교조				윤주봉(조직실장)		이원수(조직국장)
화학성유	미조직특위	김홍제(부위)			조오현(미비특위장)	임영국(사무처장)
IT				장용준(조직실장)		
이주			미셀(위원장)	이정원(교선차장)	미셀(위원장)	정영섭(사무차장)
서울	미조직특위	이남신(부분부장)	조현호(미비특위장)	김진역(조직국장)		오상훈(조직부장)
인천	비정규대표자회의	최동식(부분부장)	장광수(부분부장)	조남수(미비국장)	장광수(부분부장)	조남수(미비국장)
경기	미조직특위	조환구(부분부장)	박신영(부분부장)	박정호(미비국장)	윤병일(수석부분)	박정호(미비국장)
충북				김남균(미비부장)		홍수기(미비부장)
대전	미조직특위	조민제(부분부장)	서원도(사무처장)	박병률(조직부장)		유용문(조직국장)
충남	미조직특위	박종필(부분부장)		김성호(비정규부장)		
전북	미조직특위	정광주(지역건설위)	정병욱(익산부의장)	최종호(대협국장)	김태원(화물연대)	조혜진(조직부장)
광주	미조직특위	홍광표(수석부분)	강신원(부분부장)	지은경(미비국장)	강신원(부분부장)	양성현(미비국장)
전남			장욱기(부분부장)	윤부식(조직국장)		윤부식(조직국장)
대구	미조직특위	윤병태(비정규교수)	김형계(사무처장)	박희은(미비국장)	김형계(사무처장)	박희은(미비국장)
경북	특위급미비실			이남진(미비국장)		김용식(사무처장)
부산				최승환(조직부장)	천연옥(부분부장)	김재남(미비국장)
울산		이영도(미조직특위장)		전필원(미조직국장)	윤장혁(수석부분)	박재석(미비국장)
경남	미조직특위	고용수(부분부장)		강성진(조직국장)		강성진(조직국장)
강원	비정규특위	박경선(재능지부장)	이선인(위원장)	박경선(조직국장)	이선인(위원장)	조재명(조직부장)
제주			김동도(미비특위장)	김성훈(비정규부장)	김동도(미비특위장)	김성훈(비정규부장)
총계	미비특위 18곳, 미비특위장 17명		미비특위장 21명, 미비특위위원 30명		미비특위장 19명, 미비특위위원 27명	

* 주 : 2004년 현황은 미비특위 구성 초기임을 감안하여, 미비특위 구성을 중심으로 기입

* 출처 : 민주노총 각 연도별 대의원자료(1월 기준), 미비특위 회의 자료에서 재구성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 주요 조직들 또한 미조직 비정규 담당 인력은 매우 적은 상황.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고 2기 전략조직화 성과가 좋은 산별연맹의 경우에도 사무처 인력(공공운수 미비담당 5명, 서비스 미비담당 1명, 건설 미비 담당 0명)의 10%가 안 되는 상황임.[*그나마 현재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미비 담당부서와 인력이 가능한 곳들임]

□ 조직문화환경개선

-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이행 성과가 가장 부진한 과제 중 하나가 조직문화환경개선이며, 주요 내용은 강령 및 규약 개정과 상시교육체계 수립이었음. 그런데 조직문화환경개선은 비정규직 강령을 별도로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가입 허용과 조직화 약속 규약 개정(그나마 금속노조 정도 이행 중)은 특별히 수행된 바가 없음.⁵⁾

5)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경우 ▲비정규 강령 제개정운동을 총연맹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교육의 일상화를 꾀하며, 교육강사단 양성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조직문화 환경개선 및 인식 변화에 주요한 과제로 여겨졌던 비정규직 강령의 별도 제정과 비정규직 가입 허용, 규약 개정은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강령과 규약의 재개정 이외에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민주노총은 2006년 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도입을 규약 개정

- 한편 조직문화환경개선 중 교육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으나, 현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연맹 차원의 단선적인 (가칭)중앙교육단 설치보다는 가맹·산하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자체별 독립형 교육방식 지원으로 전환된 상태임.[* 2012년 현재 가맹·산하조직별 전략조직화 교육 내용 취합, 공통교안 제작 준비 중]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과

- 2011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결과 핵심사업(공공운수노조 공항지역 조직화 사업)과 지원사업(서비스연맹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직 사업, 건설노조 콘크리트 펌프카 조직화 사업) 3곳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곳. 실제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진행된 기간 동안 총 3,495명(서비스연맹 1,520명, 공공운수노조 973명, 건설노조 610명)을 조직한 성과가 있음. 이는 1기 전략조직화와 가장 차별되는 사업 성과로 볼 수 있음.

<표 12>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성과(2012.7)

가맹·산하조직	노조(지역)수(개/곳)	조합원(명)	비고
공공운수노조(공항)	5	973	인천공항 실태조사와 간접고용 조직화
서울본부(공단)	4	209	공단 실태조사와 지역 조직화 사업
건설연맹(CPC)	7(지역)	610	전국 펌프카 조직 거점화
서울본부(은행)	2	79	지역 요양, 간병 등
서비스연맹	3	1,520	면세점, 백화점 판매직 조직화
보건의료노조	-	-	*예비노동자(대학생 359명)
화학섬유연맹(공단)	-	-	웅상공단 발암물질 시료 확보 및 분석
공공운수노조(대학)	1	80	경희대학교
사무금융연맹	-	-	콜센터 실태조사 실시
경기본부(공단)	-	-	공단 실태조사
인천본부(지자체)	-	-	지자체 실태조사
경북본부(공단)	-	-	공단 실태조사
대구본부(중소영세)	1	24	공단 실태조사
계	23	3,495	

* 출처 : 민주노총 미비특위 내부자료(2012.6.4.)에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안으로 제출. 그러나 ‘비정규 할당제’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이후 조직문화환경개선 과제는 뚜렷하게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하다가 2009년 1월 45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대 사업과제중 하나로 설정. 조직문화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선언과 강령 개정사업을 다시 설정하고, 사업비 30%를 비정규사업에 배치하고, 비정규 사업 결과를 년 1회 지역본부와 총연맹 실천 보고대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과 자매 결연사업 의무화를 명시.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계획은 조직내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집행계획의 부재로 이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 전략조직화 사업 성과가 두드러진 조직(서비스, 공공운수)의 경우 조직문화환경(기층 조합원의 일상활동 선전전 참여, 전조합원 의무교육, 연대활동과 다차원적인 대중활동)과 법제도 및 사회적 의제화에 있어서도 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 물론 공공과 서비스의 성과는 조직 내외부적인 요인도 있으며, 예를 들면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임원 배치, 정책연구조사 결과와 조직화 사업 및 활동 결합, 다차원적인 기획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한계

－ 무엇보다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했던 조직의 절반은 애초 책정된 사업비의 50%도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임. 2011년 각 급조직에서 실제 사용한 집행금액 대비 분기별 집행율로 재구성해도 4개 조직이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 2기 전략조직화 핵심사업(서울남부) 중 한 곳인 서울남부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책정액 중 집행률은 19.7%에 불과했음. 이는 각급 조직들이 전략조직화 사업(조직 내부 사업 책임과 목표, 사업구체성, 임원 의지, 기층 조직의 참여 등) 자체가 부실한 것은 반영.

<표 13> 2기 전략조직화 사업비 집행 현황(2011)

사업	조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 금액
핵심 사업	공공운수	21.27	14.07	17.97	46.66	61,110,000
	서울남부	29.13	45.81	25.04	-	77,145,928
지원 사업	건설노조	23.65	20.56	27.11	28.66	39,313,422
	보건의료	26.21	28.20	10.09	35.48	40,000,000
	서비스	35.32	42.25	-	22.41	40,000,000
	화학섬유		53.02	12.65	34.31	22,151,731
	경기본부	58.50	41.49	-	-	28,461,000
	서울은행	29.25	26.76	21.18	22.79	40,000,000
	경남본부	47.70	47.70	사업포기	-	4,800,000
	경북본부	-	-	60.00	40.00	10,000,000
	대구본부	-	70.00	30.00	-	10,000,000
	인천본부	87.40	-	-	12.60	10,000,000
	공공노조	-	63.21	12.55	24.22	10,000,000
	사무금융	-	-	-	100.0	10,000,000
	계 (비율)	108,773,028 (26.78)	132,342,000 (32.58)	66,945,080 (16.48)	98,129,853 (24.16)	406,189,961 (100.0)

*주 : 1) 경남본부의 경우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중단으로 미집행금액 환입 조치

2) 집행률은 사업비 책정액이 아니라 당해년도 사업 집행금액 대비 분기별 집행율로 기입

*출처 : 민주노총 미비특위 6차 보고자료에서 재구성.

－ 이처럼 전략조직화 사업의 예산 신청과 사업 계획 자체가 애초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노동조합 태도와 의사결정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임. 무엇보다 조직화 사업이 조직적 결의와 추진 의지 및 필요성보다는, 총연맹과 해당 중앙(본부)의 관성적 태도(사업비 신청과 활용)에서 기인된 결과로 봐야 함. 이는 전략조직화 사업비(최대 3억, 최소 1

천만원) 지원이라는 물적 자원의 획득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산하가맹 조직 거의 대부분이 준비 없이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중도 사업포기, 사업 방향 전환, 사업 집행률 미비 등).

- 게다가 2011년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취지로 고려될 수 있는 ‘조직문화 환경개선’(강령 및 규약, 단협 개정, 비정규직 할당, 조합원 교육, 홍보 등)이나, 단위노조 일반 조합원의 사업 참여는 일부에 불과. 물론 일부 조직의 경우 새로운 시도와 내용(대중 강연, 기획사업)도 있으나, 조직화 주체와 노동계급의 연대성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주체(기존 조직과 간부, 조합원)의 참여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 하지만 몇몇 조직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적인 구체적 사업안이 도출되지 못했음.

- 실제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대부분 조직 내외부 회의 및 간담회, 실태조사, 정기 선전전-캠페인, 상담활동이 주된 사업이었음. 초기엔 거의 대부분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선전전(공항, 서울남부, 은평, 화섬, 서비스, 경기, 경남, 공공서비스)이나 상담센터(공항, 서울남부, 은평, 경남, 서비스)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했음. 이들 사업 중 지역 최임 문제, 최임 투쟁, 최임 선전전 등은 기존 노동조합의 일상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들임. 다만, 보건과 공공서비스의 노학연대 사례(예비노동자 캠프, 공동기획 등)는 성과적 측면보다 과정적 측면에서 내용적 한계에 비해 기획 자체에 의미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끝으로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대정부 및 지자체 의제화나 법제도 개선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여론)로 연결될 때 그 효과는 매우 큼. 가맹 산하 조직에서 제출한 총 13개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안과 비교하면 일부(서비스, 공공, 건설)를 제외하고는 법제도 & 의제화 및 개선 활동은 매우 미약. 물론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핵심 목표 대상(공단, 직종, 업종 등)의 법제도 및 지역사회 의제 관련 사업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사업 활동이 부진한 조직들의 경우 목표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도나 사회적인 의제화가 약한 것임.

(3) 향후 주요 과제와 덧붙리

□ 전략조직화 방향

①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지역 단위 혹은 업종 조직화 차원에서 ‘조직적 근거지’(유니온 씨티) 확보와 건설(선거제도를 활용한 정치적 기회구조 포함)을 목표로 중장기적 사

업 방향과 고민 필요[*목표설정 depth]

② 기존 사업장의 신규 조합원 충원활동으로서 ‘내부 조직화(internal organizing)’가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려는 ‘조직 확장’(예: 지역공단 조직화, 공항지역 조직화, 서비스 판매직 조직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조직 확장 expansion]

③ 기존 노동자 집단의 추가 조직화 접근보다는 여성·청년·이주·장애인·야간 노동시장 등 저임금 비정규직과 같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예: 청년 유니온, 이주노조 사례) 조직화에 대한 고민 필요[*외연 확대 enlargement]

④ 조직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특정 조직대상 집단에 대해 상당 기간 전문적인 활동역량 투입(조직 내외부 네트워크 활용 포함)을 통해 집중적이며,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예: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자원동원)을 전개할 필요 [*조직화 집중 concentration]

⑤ 조직화 사업 추진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민주노조 가입과 건설을 독려(예: 대중사업과 병행하는 조직화 사업, 건강권 의제화)하는 것 필요 [*조직화 대상 focus]

⑥ 노동조합은 기존의 조합원이나 사회집단들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활동가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주요 과제

－ 지난 1기와 2기 전략조직화 사업 과정에서 총연맹 역할에 대한 직간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 또한 향후 민주노총의 각급 조직들이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은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 총연맹 사업 시스템 구축(상설 담당기구 혹은 센터 : 제도화, 안정화)
- 총연맹 임원의 의지(리더십)와 사업 참여와 개입
- 전략조직화 방향과 대상 선정 및 주도적 사업진행(선택과 집중)
- 전략조직화 사업의 다차원적인 지원체계 구축(네트워크 형성)
- 전략조직화 관련 의제화(사회적 확장) 및 대중사업
- 공단조직화 및 이주, 중소영세사업장의 정책연구조사
- 전략조직화의 모범 사례 발굴 및 보급(전형 창출)

- 전략조직화 단위와 정책연구자 결합(1조직 1연구자)⁶⁾
- 전략조직화 선정 사업의 ‘재정과 전담인력’지원 사업 모색(기금 + 조합비)
-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공공 기획사업 진행(산별연맹 + 지역본부 + 연대단체)

6) 실제로 서비스, 건설, 공공 등의 캠페인 및 선전전, 기획사업 등은 주요 언론(TV, 신문) 등에서 해당 조직화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이슈가 사업의 주요 동력이었음. 때문에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나 정책 연구들은 해당 조직 내부 담당자들과 함께 조직화와 연결 될 수 있는 정책적 의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참조]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주요 단위별 사업 내용 요약

	산별·연맹(가맹조직)			지역본부(산하조직)		
	공공운수노조 (핵심사업)	서비스연맹 (지원사업)	건설노조 (지원사업)	서울지역본부 (핵심사업)	경북지역본부 (지원사업)	경남지역본부 (지원사업-중도 포기)
조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조직 : 973명 - 2011년: 403명 공항버스 39 소방대 130 탐승교 179 세관 34 월드유니텍 21 - 2012년(6월): 570명 [설비] 승강 54 탐승교 47 델타항공15 화물연대 300 김포공항(청소) 32 두레크린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조직 : 1,520명 - LVMH(백화점) 650명 - 부루벨(면세점) 634명 - 엘코잉크(면세점) 23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조직 : 610명 - 2011년: 260명 청주 40 울산 40 부산 타설 140 청주한라레미콘 40 - 2012년(6월) : 350명 전북건설 레미콘 110 울산레미콘(준) 220 경남건설 펌프카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조직 : 209명(4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영세 : 미비 [* 학비 : 2012년 상반기 4백여명(학비경북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없음 [*전략조직화 사업 포기 이후 자체 학비 조직화 사업으로 방향 전환 → 학비:1,400여명(2011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노동자 학교 개설 -신규노조 활동가 교육 [교섭, 노조 활동 등] 전략조직화사업 단위 역량 강화 교육 - 2012년 전조합원 교육(9월) * 2011년:440명 * 2012년:272명(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조 교육 체계 - 신규노조 간부 교육 - 간부&수도권 조합원 교육 - 3개월 이내 전조합원 교육 - 매년 전조합원 의무교육 [2012년 2,70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조직화 교육(40명) 펌프카 산안(53명) 분회 간부 수련회(6명) 수도권 분회 교육 - 단체협상 교육 분회교육(노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조합원 : 506명 신규 조합원 : 73명 씨엔비텍 : 36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 지역 민주노조활동가 대상 전략조직화 계획 간담회, 토론회 * 학비: 공청회 및 간담회 조합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조직 사업 담당 활동가 교육 *학비: 공청회 및 간담회 통한 조합원 교육.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없음
일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선전전 - 월 2회 공항 4곳 진행 - 각 사업주체 동시다발적 개최 - 현장 조합원 및 연맹 무료노동상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선전전(1회 ~ 150회) : 3,763명 [평균 28.1명] -조합원:2,974명[평균22.7명] -연맹&연대단위:7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분회별 매주 조합원 선전전 각 지역분회별 투쟁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선전전 : 26회 최저임금 집중 선전전 : 3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경산 부정기적 진량공단지역 출퇴근 선전전(지부 소속 간부 10여명, 유인물 1천부 배포) * 경주 부정기적 용강공단, 외공단 출퇴근 선전전(지부 소속 사업장 간부 등 20여명, 유인물 2천부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월 2-3회 공단지역 노동 상담 홍보 선전전. 전략사업단 및 연대단위 상근자 중심 대면 활동 학교: 학비 경남대책위 토론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
기획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도날자’ 공항신문발행 ‘공항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행동(삶바캤페인)’ 문화제 기획 - 마라톤, 체육대회, 공연, 증언대회 등 구성 대중강연(2회: 4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 연휴 퍼포먼스(차례상지내기) 영업시간 단축 플래시몹 면세점 영업시단 단축 1인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설공정 유관업종 공동집회 - 수도권, 울산, 부산 등지에서 진행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이라는 안전 매뉴얼 책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지락 광장사업(8월 이후 월 1회) - 선전전 - 베틀시장 - 법률상담 - 먹거리, 놀거리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경산 진량공단 내 ‘최저임금 문화제’ 개최. → 공단입구 이주노동자쉼터 공간. * 경주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노동 상담 홍보 LED 간판 설치 * 학비: 학비 의제화, 대책위 구성, 조직화 과정(3개월)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사업비 : 9.32% 미조직 사업비 : 5.16% [최근 5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사업비 : 10.64% 미조직 사업비 : 11.14% [최근 5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사업비 : 9.83% 미조직 사업비 : 7.6% [최근 3년 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연맹 지원금 : 77,145,728 기타 : 1,698,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쟁의비 : 44% 미조직 사업비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사업비 : 2.5% 미조직 사업비 : 8%수준 → 2012년 조직화 기금 2천만원 마련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사무처 : 65명 조직 담당 : 8명 미비 담당 :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 사무처 : 6명 조직 담당 : 3명 미비 담당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 사무처 : 19명 조직 담당 : 4명(2012년 2명) 미비 담당: 없음(조직쟁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위 : 7명 조직 담당: 6명 정책 기획: 3명 상근: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 2명 조직 : 공식 미비 :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5명 조직: 1명 미비: 1명
조직 협의 논의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지역본부 등과 공동 선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지역본부와 공동 선전전 신규 노조 단체 교섭 체결 연대(백화점-면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회 설립된 지역의 지역본부, 건설기계지부와 공동 집회 및 미조직지역 초동주체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금속노조+사회단체+지역정당 간 네트워크 방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민주노조운동 인적 네트워크(일반노동조합,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지역 진보연합, 이주노동인권센터, 금속노조 상근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연대단위(진보정당 지역위, 진보연합, 이주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학비: 연대단체(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노조, 학부모회, 여성회)
타조직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협의회 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건강권 문제 대응 정책사업 공개토론회 시 정당들과 공조 인천 진보정당 지역위원회 등과 조직사업 공유/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연석회의 운영(15회) 면세점노동조합협의회(상급단체 없는 노조와 공동대응) 정책자문위원회의(자문위원과 주기적 조직화 사업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펄프카 일요휴무 관행화 산업안전공단 펄프카 안전교육 제도화 펄프카 자격증 제도 신설 - 국민권익위 의견서 제출 및 간담회 펄프카 노동환경 실태 이슈화 - 기자회견, 증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연맹 전략조직화 회의 금속노조 '공단조직화'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경주 자체 제조업체 현황 파악, 6대 원칙과 방향 제시한 조직화계획 제출. 경산 민주노총 중앙진행한 공단지역 실태조사 	
정책 연구 조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물류 전략조직화 계획 수립 연구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면세점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 진행 → 임단협 활용 한길리서치 여론조사(2012.1.4.) 결과 유통특별법 근거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펄프카 실태조사 해외사례연구: 일본 펄프카 조직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남부 노동자 기초실태조사 구로지역 정책연구 보고서 전략초안 마련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비: 공공기관 자료 실태조사, 교육위원
법제도 의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간접고용 사회적 이슈 공사, 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상설화 요구 작업장 유해환경 유인 조사, 인천공항 내 노동보건소(병원) 설립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 특별법 제출 대형마트 의무휴점제(직간접적) 국회 의원 공동 기자회견 감정노동 가치 인정 : 감정노동수당, 감정노동휴가 쟁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 기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학비: 직접고용 조례 개정 추진. 호봉제 도입 제도 개선 추진
기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조합원 의무 교육(3,865명)에 2,706명 참여 → 진보정당 1,914명 가입 → 4.11총선 조합원 투표 인증샷 콘서트 약 653명 참여. 투쟁사업지원 기금(1-2-3 연대기금) 참여 간부의 28.5%(16명)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업주 상대로 한 집단교섭 진행 - 대구 펄프카 분회는 임단협 체결 - 수도권 및 부산 분회는 2012년 내 체결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노동복지센터 설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비 처우개선 활동

비정규 전략조직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오세용(경주이주노동센터대표)

1.

이번 ‘비정규 전략조직화와 조직문화 혁신’ 토론회에서 저에게 요청된 내용이 ‘중소영세·미조직·비정규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대로라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민주노총의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이후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해 왔다면 모르겠지만 지난 8. 29(수) 토론회 발제요청을 받고 9. 6(목)까지 발제문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상, 부족한 개인역량상, 최근 이주노동자관련 업무의 폭주로 기껏 하루에 2~3시간 정도의 짬을 낼 수 있는 조건상, 더욱 중요하게는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별도의(?)’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상, 위 주제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발제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 발제자 변경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남은 짧은 기간에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발제 요청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결국 내용의 부족함을 변명하자는 것이자,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걸맞는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내용과 깊이가 있는 발제를 기대하신 동지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의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첫 출발부터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직 활동가들 배치부터, 산별조직에의 할당·배분이라는 잘 못 끼워진 단추로 시작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준비되던 2004~2005년 당시 저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비정규특위장으로 월 1회 개최되는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에서

는 매 회의시마다 주요한 안건중의 하나로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0억 기금을 모아 90명의 조직활동가를 양성해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 조직화사업을 진행한다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실망스러웠던 것은, 산별조직들의 태도와 이에 이끄러가는 민주노총 중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름지기 민주노총 차원의 전략조직화라 하면 자기 조직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 차원의 전략조직화를 고민해야 할텐데, 몇몇 산별조직들은 자신들 조직의 비정규 조직화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조직 활동가의 산별조직에의 할당·배분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50억 기금모금의 주체가 산별조직이라며 그 모금액수에 비례해 조직 활동가를 요구하는 주장조차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관철되어졌습니다.

당시 몇몇 지역의 특위장들은 ‘전략조직화’에 걸맞는 사업을 주장했었습니다. 예를들어 유통·서비스 부분의 전략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서울·부산 같은 대규모 유통·서비스 지역에 조직 활동가들이 집중 투입되어야 하고, 포스코 및 그 협력업체 전략조직화가 필요하다면 포항과 광양에 조직 활동가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5년~10년을 내다보고 활동해야지, 산별조직에 조직활동가를 분산·배치하면 이는 해당조직에 비정규사업담당자 몇몇 늘려주는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할 것이라 비판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산별조직들의 주장은 서울이나 부산, 포항이나 광양 등 ‘지역’으로 집중하자는 것을, 마치 산별조직들을 배제하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즉 ‘지역으로의 집중=민주노총 지역본부 주도의 전략조직화’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비정규 전략조직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함께, 민주노총 혁신과제로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의 관계, 즉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와의 관계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초기방향을 규정짓는데 나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민주노총의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조직활동가 배치부터 전략조직화 사업에 걸맞지 않게 시작되었다는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조직 활동가들을 전략부문이 있는 핵심지역으로 집중배치해 사업을 진행했으면 전략

조직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을까요? 이 역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산별 조직에 조직 활동가들을 분산·할당 배치한 것 보다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마도 현재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부지역’에서, 아니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조직에서 겪고 있는 문제일 것인바, 바로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이 과연 ‘전략조직화’라는 말에 걸맞게 전 조직이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해당 ‘전략조직화 사업단’ 혹은 ‘비정규특위나 비정규사업담당자’들만의 고군분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북지역에서 ‘비정규 조직화’ 사업으로 실천했던 ‘경북지역일반노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지역일반노조는 민주노총의 1기 전략조직화 사업준비가 마무리될 즈음인 2005년 6월 출범했습니다. ‘일반노조’라는 이름의 조직으로는 거의 막차를 탄 셈이었습니다.

경북지역일반노조는 기존의 다른 일반노조들과는 다른 목표와 지향, 그리고 위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존 일반노조들의 한계인 양적 중심의 조직화·정파 조직화를 넘어서는 조직으로, 임단협 중심·사업장 활동중심 등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기존 민주노조들이 소홀히 해왔던 이주노동자 조직화, 지역사회운동의 실천 등을 자신의 주요한 사업으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체계상으로는 별개의 비정규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즉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주요 핵심사업이 중소기업·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이고, 이를 실천할 **‘지역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단위’로 경북지역일반노조**를 출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섭하고, 투쟁하는데 있어 여타지역의 일반노조들과는 다르게,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 동지들 및 지역차원의 지원·연대가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몫은 경북지역일반노조 집행부의 몫이었습니다. 냉혹히 평가하건대 **경북지역일반노조는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단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위**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노총 경북본부를 비롯해, 산별조직의 지역조직들은 대부분 핵심과제로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의 지침을 수행하는 역할, 소속 사업장들을 관리하는 역할, 지역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연대의 역할** 등 기본 일상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조직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리조직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북지역일반노조를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단위로 위치지은 경북지역조차 이러할진대, 다른 지역이나 산별조직들은 더 심할 것이라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전 조직이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위치짓고, 전 조직적 시스템을 여기에 맞춰 가동하지 않는한 실질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은 요원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 사업담당자 혹은 미비특위에서만 고군분투하는 사업을 ‘전략조직화’ 사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민주노총 경북본부 산하 경주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민주노총 경주지부에서는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조응해 ‘지역차원의 비정규·중소영세 조직화 계획’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011년초 ‘비정규 기획팀’을 구성해 그 준비를 거쳐 ‘조직화 계획안’을 2011. 5월 지역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계획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를 추진하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획안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차원에서는 이렇게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진행하려 하는구나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화 계획은 1년 넘게 계속 계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화 사업계획이 통과된 2011. 5월 당시에는 임단투시기이니 임단투가 끝나고 진행하자는 것이었고, 임단투가 마무리되자 이제 핵심동력인 금속노조경주지부 및 소속지회들의 선거시기이니 선거가 끝나고 하자는 것이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자 바뀐 집행부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기존 정규직노조 중심의 관행적 활동이 지역차원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는 전 조직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예전보다 힘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노조간부·활동가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올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기존 관성적·관행적 정규직 중심의 활동 메카니즘과 함께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현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거시기에 보였던 전 조직적 그 열정과 노력이 비정규 전략조직화에도 투여된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핵심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웬만한 노조간부·활동가들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번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도 첫째날과 셋째날의 주제로 주요하게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의 핵심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든 조합원들까지 망설이지 않고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라는 답이 나오게 될 때를 기대합니다. 이는 전조직이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동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조직활동가의 집중배치도 중요하지만, 이전의 관성적·관행적·과잉정치화된 활동을 극복하지

못한 채 비정규사업 담당자나 비정규사업단위만의 사업으로 비정규 조직화사업을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전 조직이 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전략조직화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4.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방향은 ‘**공단 중심의 중소기업·비정규 전략조직화**’로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이자, 조직 활동가들 내에서 조직화의 마지막 섬으로서 가장 조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야기되는 영역이기에 전략조직화라는 이름하에 추진할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첨언하자면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현대모비스나 동희오토 같은 곳뿐만 아니라 이미 중소기업사업장 대부분은 정규직 없는 사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내하청이나 인력용역업체를 통한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노동자 문제로 부딪혔던 곳은 전체 120명 정도가 일하는 자동차부품 사업장인데 이 조그만 공장에도 정규직은 관리직뿐이고,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120여명의 노동자들은 5개의 사내하청 및 인력파견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 소속 노동자중 절반은 정주노동자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등록·미등록의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쓰다버리는 1회용 소모품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비정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영역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의 범주 속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는 하나!를 넘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노동자는 하나!임을 더 늦기 전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공단 중소기업·비정규 조직화에 있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주요하게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몇 지역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있어 보편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볼 때 정규직을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로 본다면, 이주노동자들이 볼 때는 정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로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이주단체들 중심의 시혜와 대리·지원중심의 사업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워내고 조직화하는 활동에 민주노조운동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

‘비정규 전략조직화’와 관련해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조직화만이 아니라, 내용적 조직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용적 조직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노조를 꿈꾸며 출발했던 경북지역 일반노조에서, 2010년에 5년의 활동을 평가하며 내린 결론은 ‘기존 정규직 노조 따라가는 또 하나의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고 말았다는 반성이었습니다. 조직규모로는 400~500명 선을 조직하며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조직의 내용을 제대로 채워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경북일반노조 집행부를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업장별로 조직하고, 사업장별로 교섭하고, 사업장별로 투쟁이 전개되며 경북지역일반노조는 현재 상근자 2~3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라 할 수 있는 400~500명 선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러한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조직-교섭-투쟁에 매몰되다 보니 조합원들의 변화를 꾀하는데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합원들은 기존 노조와 마찬가지로 내 임금-내 노동조건 향상이 주된 관심사로 되어 버렸습니다.

한 예로 경북지역일반노조 소속인 모 대학 청소용역 조합원들은 경북지역의 대학교내 청소노동자들 중 최고(?)의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했던 것은 해당 조합원들이 ‘야! 노조에 가입하니 이렇게 고용도 안정되고 노동조건도 향상되고 뒤늦었지만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지역의 모든 청소용역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해야 겠구나!’하는 바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더 나은 임금·수당과 상여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높은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조,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노조가 아니라, 기존 정규직 노조가 십수년 동안 반복해온 관행을 2~3년만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닌데...이러려고 경북지역일반노조를 만든 게 아니었는데...’하는 자책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새로이 조직하면 투쟁, 그것도 장기투쟁에 돌입해야 하고, 1주일에 7~8회의 교섭에 매달려야 했기에 내용을 채워내는 활동을 하기 어려운 조건도 있었지만, 몇 개사업장을 몇 명의 조합원을 조직했는가를 주요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외부적 시각을 무시하지 못한채 성과주의적인 가시적 조직화에 빠져든 측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조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조직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조직하지 않은 건만 못하다고까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2기 전략조직화 방향에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초기업노조로 조직하고, 사업장별 조직화가 아니라 지역(공단)으로 조직하고, 사업장별 교섭·사업장별 단체협약이 아니라 지역(공단) 협약을 추진한다는 등 이전보다 많은 올바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대로 된 노조, 제대로 된 활동가들을 만들어내어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내용적인 조직화도 더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그 내용적 조직화의 방향으로 “생활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지역사회운동의 결합”을 제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6.

비정규 전략조직화와 관련해 대략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비정규 전략조직화를 위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산별조직과의 고질적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 전 조직적 핵심사업으로 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양적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질적·내용적 조직화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결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곳에서 많이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상황에 빠진 것은, 중소기업·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여러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자 할까요?

지난 8월15일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이주노동자 관련 내용이었지만, 날이 날인만큼 서두에 8.15에 대해 한마디하고 시작했었습니다. 8.15는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할 날이 아니라, 반성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현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상황은 87년 노동자대투쟁 기념의 의미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비정규 전략조직화로 그 돌파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부족한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계획(안)

2011년 5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경주지역 비정규 ·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계획(안)

- I. 왜 비정규 ·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인가?
- II. 조직화의 원칙과 방향
- III. 조직화 대상 : 어디를 조직할 것인가?
- IV. 조직화 계획 :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I. 왜 비정규 ·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인가?

1. 전국 비정규 · 중소영세노동자 현황

① 비정규노동자 현황

한때 전체 임금노동자의 60% 가까이 치솟았던 비정규직 비율은 그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되기 시작해 2010년 8월 현재 50.4%로 낮아졌음. 그러나 여전히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해 859만명에 달하고 있음.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비정규직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12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임금 266만원의 46.9%에 불과해 그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사회보험 적용율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가입률이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6%밖에 안됨. 퇴직금 · 상여금 · 시간외수당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73~100%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6~32%만 적용받는데 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은 전체 11.4%의 조직률(195만명)중 정규직의 경우 178만명으로 21.1%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7만명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임.

[표]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2010년 8월 현재)

구분	인원 (천명,%)	월평균임금 (만원,%)	사회보험 적용율(%)			노동조건 적용율(%)			노조조직율 (천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임금노동자	17,047 (100.0)	195	65.0	67.0	58.6	63.1	64.7	44.4	1,945 (11.4)
정규직	8,455 (49.6)	266 (100.0)	98.0	98.8	83.0	99.5	98.1	73.1	1,780 (21.1)
비정규직	8,592 (50.4)	125 (46.9)	32.4	35.8	34.5	27.2	31.8	16.3	16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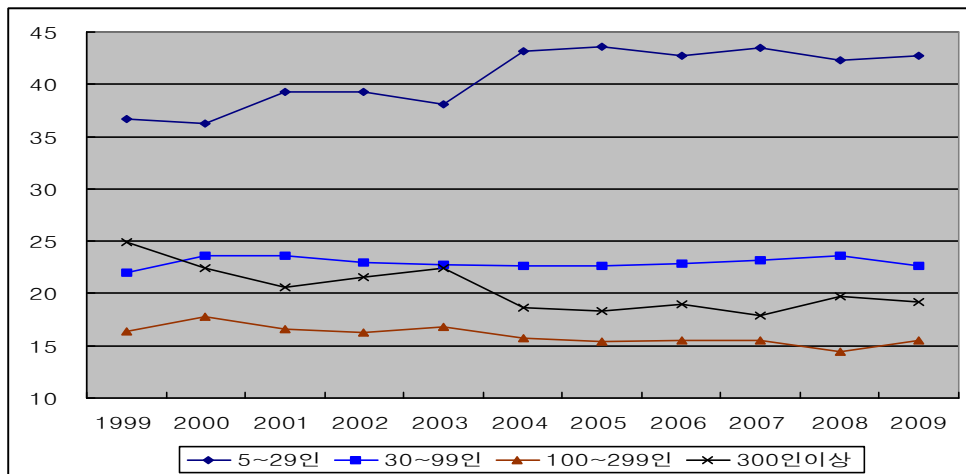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0. 11)

② 중소기업노동자 현황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비중은 1999년 24.9%에서 2009년 현재 19.2%로 약 5.2% 하락했고, 100~299인 사업장의 노동자 비중 또한 같은시기 16.4%에서 15.5%로 약 0.9% 하락했음. 반면 5~29인 사업장 노동자 비중은 1999년 36.7%에서 42.7%로 약 6.0% 증가했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으로부터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상징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의 하향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그림> 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추이



※ 자료: 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조사, 각년도.

※ 『중소영세 노동권보장을 위한 매뉴얼-민주노총 전략조직화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 2011년)에서 재인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압도적 다수는 중소기업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28만3천명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의 14.7%에 그치는 반면, 1~4인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270만6천명으로 84.7%라는 경이적인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즉, 사업체 규모가 줄어들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와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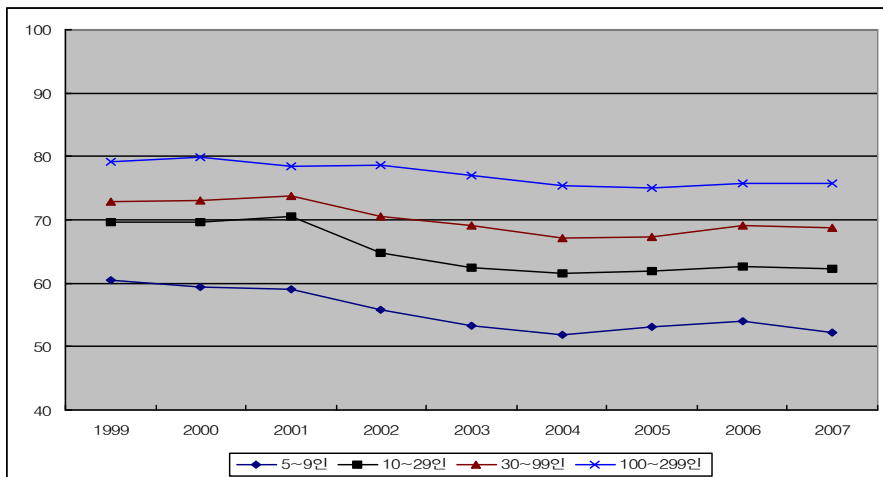
[표]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단위: 천명, %)

구 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196 (100.0)	2,906 (100.0)	3,859 (100.0)	3,485 (100.0)	1,675 (100.0)	1,929 (100.0)
정규직	490 (15.3)	977 (33.6)	1,890 (49.0)	2,168 (62.2)	1,285 (76.7)	1,646 (85.3)
비정규직	2,706 (84.7)	1,929 (66.4)	1,969 (51.0)	1,317 (37.8)	390 (23.3)	283 (14.7)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10. 11)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비교한 중소기업사업장의 임금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5~9인 사업장을 보면 1999년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총액의 60.4% 수준에 머물렀으나,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돼 2007년에 이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수준인 불과 52.4%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사업체규모별 임금 상대비 추이 (월임금총액기준, 300인이상=100)



※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년도.

※ 『중소영세 노동권보장을 위한 매뉴얼-민주노총 전략조직화를 중심으로』 (민주노총·2011년)에서 재인용

③ 소 결

결국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임.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인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겠음.

2.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현황

① 비정규노동자 현황

경주지역은 2009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26만7천5백명의 인구중, 임금노동자 수는 94,917명임. [통계청 통계로는 경주시의 전체 취업자 13만1천3백명중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수를 56,700명으로,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수를 74,500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주시의 통계인 ‘산업별 종사자수 현황’인 94,917명으로 임금노동자 수를 산정하도록 함.]

이를 토대로 경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추정해보면 47,838명(94,917명×전국 비정규노동자 비율 50.4%=47,838명)으로, 5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표] 경주지역 경제활동인구(2009년말 현재)

구 분	전국(천명)	경주시(천명)	비 고
주 민 등 록 인 구	49,773	267.5	한국인 기준
15세이상 인구	40,992	219.2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
경 제 활 동 인 구	24,394	134.0	취업자 + 실업자
취 업 자	23,506	131.3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자, 직업·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병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실 업 자	889	2.7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자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15,698	85.2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육아·가사, 재학·수강, 연로, 심신장애, 기타(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등)]
경제활동참가율(%)	60.8	61.3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고 용 율 (%)	58.6	60.0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실 업 율 (%)	3.6	2.0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사 업 체 수 (개)	3,293,558	19,454	경주시 통계연보(2009년)
종 사 자 수 (명)	16,818,015	94,917	경주시 통계연보(2009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주시 통계연보(www.gyeongju.go.kr)

※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분류

만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등	
정규직	비정규직		

[표] 경주지역 비정규직 현황 추정(2009년말 현재)

구 분	전 국		경주시	
	인원(천명)	비율(%)	인원(명)	비율(%)
임금노동자	17,047	100.0	94,917	100.0
정 규 직	8,455	49.6	47,079	49.6
비정규직	8,592	50.4	47,838	50.4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주시 통계연보(www.gyeongju.go.kr)

② 규모별 사업체 · 종사자 현황

경주지역의 2009년말 현재 사업체수는 총 19,454개인데 이중 5인미만 업체가 16,586개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고, 50인미만 업체는 19,224개로 98.8%를, 100인미만 업체는 19,374개로 99.6%를 차지하는 등 거의 대부분이 1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체임을 알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를 보면 2009년말 현재 94,917명중 5인미만 업체 종사자가 28,985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고, 50인미만 업체 종사자가 62,211명으로 65.5%를, 100인미만 업체 종사자가 72,378명으로 76.3%를 차지하는 등 100인미만 업체 종사자가 경주지역 전체 종사자수의 4분의3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9년말 현재)

구 분		1~4	5~9	10~19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이상	계
전 국	사업체수	2,723,977	318,883	135,434	75,498	25,022	11,692	1,632	956	464	3,293,558
	비율	82.71	9.68	4.11	2.29	0.76	0.36	0.05	0.03	0.01	100.00
	누계	82.71	92.39	96.50	98.79	99.55	99.91	99.96	99.99	100.00	100.00
	종사자수	4,881,624	2,031,361	1,793,410	2,260,152	1,706,469	1,841,102	622,162	654,416	1,027,319	16,818,015
	비율	29.03	12.08	10.66	13.44	10.15	10.95	3.70	3.89	6.11	100.00
	누계	29.03	41.11	51.77	65.21	75.36	86.31	90.01	93.90	100.00	100.00
경 주 시	사업체수	16,586	1,520	653	465	150	64	8	5	3	19,454
	비율	85.26	7.81	3.36	2.39	0.77	0.33	0.04	0.03	0.01	100.00
	누계	85.26	93.07	96.43	98.82	99.59	99.92	99.96	99.99	100.00	100.00
	종사자수	28,985	9,844	9,089	14,293	10,167	11,024	3,110	3,916	4,489	94,917
	비율	30.54	10.37	9.57	15.06	10.71	11.61	3.28	4.13	4.73	100.00
	누계	30.54	40.91	50.48	65.54	76.25	87.86	91.14	95.27	100.00	100.0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주시 통계연보(www.gyeongju.go.kr)

③ 산업별 사업체 · 종사자 현황

한편 경주지역의 2009년말 현재 산업별 사업체수를 보면 총 19,454개중 관광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듯 (1)숙박및음식점업이 5,062개(2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2)도매및소매업 4,591개(23.6%) → (3)수리및개인서비스업 2,361개(12.1%) → (4)제조업 2,042개(10.5%)의 순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국적인 산업별 사업체수 평균인 (1)도매및소매업 26.2% → (2)숙박및음식점업 19.1% → (3)수리및개인서비스업 11.2%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경주지역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보면 2009년말 현재 94,917명의 노동자중 (1)제조업 29,119명(30.7%) → (2)숙박및음식점업 13,395명(14.1%) → (3)도매및소매업 10,405명(11.0%)의 순을 보이고 있음. 이 역시 전국적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인 (1)제조업 19.4% → (2)도매및소매업 15.6% → (3)숙박및음식점업 10.5%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조업<30.7% : 19.4%>과 숙박및음식점업<14.1% : 10.5%> 종사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9. 12월말 현재. 단위: 개, 명, %)

구 분	전 국				경 주 시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수	비율	인원	비율	개수	비율	인원	비율
전 산 업	3,293,558	100.0	16,818,015	100.0	19,454	100.0	94,917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302	0.1	29,362	0.2	17	0.1	183	0.2
광업	1,840	0.1	17,147	0.1	13	0.1	78	0.1
제조업	320,374	9.7	3,269,339	19.4	2,042	10.5	29,119	30.7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74	0.1	67,661	0.4	14	0.1	1,683	1.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038	0.2	65,576	0.4	41	0.2	367	0.4
건설업	94,716	2.9	894,504	5.3	533	2.7	4,901	5.2
도매 및 소매업	861,736	26.2	2,626,339	15.6	4,591	23.6	10,405	11.0
운수업	344,071	10.4	972,831	5.8	1,555	8.0	3,270	3.4
숙박 및 음식점업	628,078	19.1	1,757,715	10.5	5,062	26.0	13,395	1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178	0.7	429,109	2.6	60	0.3	661	0.7
금융 및 보험업	38,341	1.2	682,428	4.1	182	0.9	2,547	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804	3.8	444,185	2.6	392	2.0	1,215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7,558	2.1	728,398	4.3	276	1.4	1,321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2,812	1.0	694,417	4.1	134	0.7	1,477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768	0.3	659,265	3.9	86	0.4	4,240	4.5
교육서비스업	162,454	4.9	1,358,311	8.1	1,018	5.2	7,701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98,976	3.0	972,196	5.8	469	2.4	4,861	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02,697	3.1	323,404	1.9	608	3.1	3,060	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69,341	11.2	825,828	4.9	2,361	12.1	4,433	4.7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주시 통계연보(www.gyeongju.go.kr)

④ 소 결

경주지역도 5만여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 등 전국적 현황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경주지역의 산업별 특성에서 보여지듯이, 제조업과 숙박및음식점업 부분이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의 주요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3.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 현황

①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밀리는 상황

2010년 이후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기획탄압의 공세가 몰아치며, 경주지역은 수세적으로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자본의 공세에 굴복하여 민주노총을 탈퇴한 사업장만 4곳에 이르고 있고(금속노조 소속 영진기업·발레오만도·광진상공·전진산업), 이밖에 투쟁패배로 인한 해산(경북일반노조 소속 재활용선별장), 민주노총 사업 이탈(경신공업), 공장이전 및 부도(금속노조 소속 한국펠저·경북일반노조 소속 토비스콘도) 등이 이어지고 있음.

[표] 2010년 이후 경주지역 탄압 상황

구 분	금속노조경주지부	경북일반노조	기 타
탈퇴 해산 이전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03월: 영진기업 탈퇴 • " 03월: 한국펠저 이전 • " 06월: 발레오만도 탈퇴 • " 11월: 광진상공 탈퇴 •11. 02월: 전진산업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10월: 재활용선별장 해산 • " 11월: 토비스콘도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02월: 경신공업 이탈

발레오만도는 28명의 해고·정직자들이 1년이 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여타 사업장들도 계속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힘겨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패배감과 무력감이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팽배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임.

②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의 정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약 4년간은 경북일반노조의 신규조직화 및 투쟁과 금속노조경주지부의 활발한 조직화 사업으로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음.

이시기 금속노조경주지부는 10개사업장 1,200여명을 새로이 조직하는 등 폭발적인 조직확대를 이루어냈으며, 2005년 설립한 경북일반노조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8개사업장 150여명을 조직하고 동국대학교미화·경주CC·세천향예술단·경주교육문화회관시설 등 계속되는 투쟁에서 지역연대를 통해 승리하기도 하였음.

[표] 2005년~2009년 경주지역 조직화 현황

구 분	금속노조경주지부	경북일반노조	기 타
신규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 01월: 오리엔스(100명) •07. 06월: 대림플라스틱(100명) • " 08월: DSC(200명) •08. 03월: 대동산업(14명) • " 07월: 다스(560명) • " 10월: 인지컨트롤스(110명) • " 11월: 청우(20명) •09. 06월: 대진공업(50명) • " 11월: 영진기업(26명) •10. 02월: 고려산업(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 06월: 동국대미화(44명) • " 10월: 경주CC(13명) •06. 12월: 세천향예술단(5명) •07. 02월: 세계문화엑스포(15명) • " 04월: 경주드림센터(13명) • " 09월: 교육문화회관(14명) •09. 01월: 재활용선별장(25명) • " 02월: 토비스콘도(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 01월: 천년미소(200명)

이러한 조직·투쟁은 민중언론으로부터는 찬사를 받았고, 중앙 보수언론에는 악의적 내용으로 보도되기까지 하였음.

[표] 언론의 보도

민중언론	보수언론
<p>※ 2006. 10. 25. <u>레디앙</u> 진정한 연대파업 보여준 금속노조경주지부 25일 지역노동자 2천5백명 파업...동국대 청소아줌 마 해고철회 요구</p> <p>※ 2006. 11. 1. <u>레디앙</u> '아름다운 연대' 청소아줌마 전원복직</p> <p>※ 2009. 8. 18. <u>주간변혁산별</u> 비정규직 연대 4시간 총파업 19일 금속노조경주지부 재활용선별장 연대파업...연 대는 나를 지키는 투쟁</p>	<p>※ 2009. 7. 10. <u>조선일보</u> 경주(慶州)는 노조 천국 민노총 이탈 움직임 속 유독 경주에선 급성장 조합원 41%나 늘고 전임자 전국 평균의 3배</p> <p>※ 2009. 8. 21. <u>중앙일보</u> 민주노총 '막가파식 파업'...어디까 끝인가 민주노총의 파업양상이 정말 가관이다. 이 단체 산 하 금속노조는 그제 1200여명의 조합원을 끌고 경 주 도심에서 연대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리해 고했다는 것이 파업 이유다....</p>

그러나 2010년 이후 1년여 넘게 수세적 국면이 지속되며, 기 조직된 사업장의 유지·관리에 급급하면서 새로운 조직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채 거의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③ 소 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기존 조직 지키기로는 더욱 수세적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음.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되, 이를 넘어 공세적인 조직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또한 공세적 조직화는 현재 정체되어 있는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더욱이 2010년 Time-Off 공세에 이어 2011년 이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공세가 몰아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공세적 조직화 전략은 더욱 요구되고 있음.

II. 조직화의 원칙과 방향

1. 공세적 전략조직화로!

이후 진행하는 조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직화'를 넘어, '공세적'인 '전략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음.

'공세적'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세에 처한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 ▲정체상태인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의 활성화라는 측면 ▲복

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시대 자본의 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된다는 것임.

‘전략조직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09년)의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임.

“.....민주노총의 (1기)전략조직화 사업은.....사실상 실패라는 평가이다.....전략도 없고, 목표도 체계도 시스템도 없었으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는 평가이다.....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디를 조직할 것인지, 조직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조직대상과 어떻게 만나고 그것을 기존의 시스템 등에서는 어떻게 받아안고 투쟁을 만들 것인지 등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2009년)

결국 ‘공세적 전략조직화’란, 현시기 전체 민주노조운동 및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상황에 대한 극복·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부 담당자들만의 수동적·관성적인 조직화를 넘어 총체적인 전략하에 전 조직적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음.

2. 개별사업장 조직화를 넘어 집단적 집중조직화로!

그동안 경주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비정규·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들어오는 상담을 통한 조직화든, 찾아가는 조직화든, 여러관계를 통해 연결이 된 조직화 추진이든, 일단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소수의 내부 주체를 형성한후 짧은 준비기간(주로 노동조합 관련 기초교육 실시)을 거쳐 해당사업장을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음.

90년대의 조직화와 비교해 금속노조나 경북일반노조 소속으로 편재함으로써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업별(사업장별)로 조직’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음.

그러다보니 조직화 이후에는 ‘사업장별 교섭 → 사업장별 투쟁 → 사업장 중심의 노조활동’을 결과할 수 밖에 없었음. 이는 조직된 사업장의 규모가 10명이건 100명이건 그 규모에 상관없이 투여되는 활동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이제 이후의 조직화는 이러한 개별사업장별 조직화로 인해 많은 인력과 시간의 투여속에 다른 활동을 저해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는 이후 조직화 영역(대상)이 일정 정도 규모있는 사업장의 조직화가 아닌(이미 경주지역에서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은 대부분 조직이 되어 있음)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때도, 이전의 조직화보다 더 어려운 조직화가 되겠지만 개별사업장 조직화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화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

3. 담당자들만의 사업을 넘어 전 조직적 사업으로!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은 50억 기금 마련을 통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해 이들을 해당 조직화부문에 투입해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1기를 거쳐 2기가 진행중에 있음.(1기에서는 5대 핵심영역 전략조직화로 설정 → 2기에서는 서울남부지역과 인천공항지역 전략조직화로 설정)

그러나 경주지역의 조건상 전략조직화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활동가를 투입해 전략조직화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음. 설사 조직활동가를 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담당자들만의 조직화 사업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기도 함.

따라서 이후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경주지부 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민주노총경주지부는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위치짓고, 이를 토대로 경주지역의 산별 지역조직과 소속노조 전체를 전략조직화 사업에 복무할 수 있도록 편제·가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는 기존 조직된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활동에 머물러 있던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것이기도 함.

4.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 성과 모색으로!

그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는 주장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조기에 그 조직적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결코 아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도 그러하지만 특히 제조업의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 조직화사업 담당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함.

따라서 이후의 조직화는 그동안의 조직화 사업에서 보여진 ‘몇개 사업장·몇명을 조직했는가’라는 것을 성과로 보는 조직기능주의적·조직형식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 집단적 조직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단기적 조직성과에 연연할시 이는 ‘전략조직화’가 아닌 것으로 되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을 것임.

5. 새로운 주체형성의 방향으로!

이후의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는 단지 더 조직해서 노조수와 조합원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임. 또한 기존 정규직노조 따라가는 또 하나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이들 노조 역시 조직된 조합원 중심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임)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기존 민주노조운동에서 한계로 나타난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향과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즉,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처음부터 올바른 노동자 계급의식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그 활동도 사업장내의 임금·고용·복지 등 노동조건 개선 활동에 갇히지 않고(이는 기본이 되어야 할 활동이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현장 운동과 지역노동운동 및 지역사회운동 등에 있어서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화 초기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야 할 것임.

6. 지역운동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경주지역의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전략조직화는 단지 조직하기 위한 실무적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노동안전·이주노동자 문제 등 지역 전체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노동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제기하며 그 개선과 해결을 위한 활동과 결합되어질 때 그 의의가 있고, 또한 조직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이와함께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저임금·빈곤 등 지역 사회의 핵심적 문제이기도 한 것인바 이를 적극 제기함과 더불어, 경주지역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민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보육·의료·교육·환경·교통·주거·문화 등 생활과 삶의 영역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제기하고 지역의 제운동단체들과 함께 지역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때 더욱 의의가 있다 하겠음. 경주의 지역운동 역량을 볼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음.

Ⅲ. 조직화 대상 : 어디를 조직할 것인가?

1. 경주지역 노동조합 현황

경주지역 노동조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기 어려운데 2010년말 경주시의 자료가 그나마 근사치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에 의하면 경주지역의 노동조합은 총 91개노조(지부·지회·분회 등을 포함한 사업장 단위로 보임)에 11,653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노동조합 수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56개로 61.5%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수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6,132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총 소속은 17개노조에 3,212명이 있고, 의외로 민주노총·한국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미가맹이 18개노조에 2,309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대부분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들임)

조직률로 보면 경주지역 전체노동자 94,917명중 11,653명이 조직된 것으로 전국평균보다 조금 높은 12.3%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웬만한 규모의 사업장들은 대부분 노조가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노동조합 현황(2010년말 현재. 경주시청 자료 참조)

구 분	민주노총	한국노총	미가맹	합 계
노동조합 수	56개 (61.5%)	17개 (18.7%)	18개 (19.8%)	91개 (100.0%)
조합원 수	6,132명 (52.6%)	3,212명 (27.6%)	2,309명 (19.8%)	11,653명 (100.0%)

[표]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2010년말 현재. 한국노총경주시부 및 노동부 자료 등 참조)

번호	노동조합	소 재 지	설 립	조합원수	상급단체
1	경동세라텍	강동면 국당3리 828	1988	40	화학노련
2	경주시청	성동동 420-34	1989	210	연합노련
3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신평동 산5	1988	60	연합노련
4	경주월드	천군동 191-5	1991	40	관광서비스노련
5	남양유업	용강동 820	1987	150	화학노련
6	대동산업	천북면 오아리 108	2009	63	금속노련
7	동영산업	천북면 모아리 1146-4	1987	27	금속노련
8	솔라이트	건천읍 용명리 1075-1	2004	200	금속노련
9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외동읍 문산리 801-5	2001	220	연합노련
10	영신정공	천북면 오아리 408	1989	257	금속노련
11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	양남면 나아리 260	2001	110	연합노련
12	지코	안강읍 사방리 20-4	1987	107	금속노련
13	코오롱호텔	마동 111-1	1992	5	관광서비스노련
14	콩코드호텔	신평동 410	1988	50	관광서비스노련
15	풍산	안강읍 산대리 2222-2	1987	2,326	금속노련
계				3,865	

※ 이밖에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은행) 산하조직들이 있음.

[표] 미가맹 노동조합(2010년말 현재. 노동부 자료 등 참조)

번호	노동조합	소 재 지	설 립	조합원수	상급단체
1	광진상공	황성동 45	2010	168	(민주노총 탈퇴)
2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석장동 707	1988	112	(민주노총 탈퇴)
3	동진이공	안강읍 갑산리 592-1	2005	75	(민주노총 탈퇴)
4	명신산업복지	황성동 40	1987	83	(민주노총 탈퇴)
5	엠에스오토텍복지	내남면 노곡리 1023	2002	112	.
6	영진기업	외동읍 냉천리 345-16	2010	26	(민주노총 탈퇴)
7	전진산업	황성동 1073-3	2011	36	(민주노총 탈퇴)
8	한국메탈복지	외동읍 문산리 790	2009	14	.
9	한수원월성원자력	양남면 나아리 260	2001	1,000	.
10	현대택시	황성동 1073-2	1991	16	(민주노총 탈퇴)
11	(발레오전장)	황성동 19	(2010)	(600)	(민주노총 탈퇴 법원소송중)
계				2,242	

[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민주노총경주지부 자료)

번호	노동조합	소재지	설립	조합원수	상급단체
1	다스	외동읍 구어리 12-2	1992	600	금속노조
2	대동산업	천북면 오아리 108번지	2008	14	
3	대진공업	외동읍 문산리 242-18	2009	21	
4	동진이공	안강읍 갑산리 592-1	1993	4	
5	발레오만도	황성동 19	1987	28	
6	상희금속	외동읍 구어리1353-44	2005	3	
7	새론산업	안강읍 갑산리	2005	1	
8	시그오토맥	외동읍 구어리 12-2	2010	51	
9	아이에이치엘	외동읍 문산리 742-28	1996	313	
10	에코플라스틱	황성동 48	1987	423	
11	엠시트	외동읍 석계리 1244-1	2002	69	
12	오리엔스	안강읍 사방리 산20-1	1995	108	
13	이너지	강동면 왕신리 1056	2000	80	
14	인지컨트롤스	외동읍 구어리 1353-31	2008	87	
15	일진베어링	황성동 50	1989	216	
16	청우	외동읍 구어리 701-6	2008	15	
17	케이씨오에너지	서면 사라리 570번지	2002	66	
18	DSC	외동읍 구어리 12-1	2007	199	
19	ITW대림	외동읍 구어리 12-16	2007	104	
20	기아자동차(판매경북경주)	노서동 163-1	1960	16	공공운수
21	현대자동차(판매대경동부)	노서동 121-1	1987	34	
22	민주택시(경주)	배반동 716-5	.	282	
23	사회보험(경주)	성건동 340-4	1988	37	
24	경북관광개발공사	신평동 375	1989	105	
25	철도(기관차·승무)	성동동 113	1945	209	
26	동국대학교병원	석장동 1090-1	1995	74	
27	천년미소(버스)	충효동 710-13	.	108	
28	동산의료원(경주)	서부동 147-2	1996	36	서비스연맹
29	경주교육문화회관	신평동 150-2	1999	35	
30	필코리아(힐튼호텔)	신평동 370	1994	100	
31	현대호텔	신평동 477-2	1992	185	사무금융연맹
32	농협노조(경주)	노서동 163-2	1997	202	
33	축협노조(경주)	노서동 119-5	1999	46	공무원노조
34	공무원노조(경주)	동천동 800	2003	1259	
35	전교조(경주초등·중등)	충효동 2980-7 4층	1989	460	전교조
36	경신공업	강동면 오금1리 산11	1987	317	지역
37	경북일반노조(경주)	배반동 716-5	2005	66	
계				5,993	

※ 이밖에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연맹(보험·증권 등)과 화물연대·덤프연대 산하조직들이 있음.

2. 경주지역 공단 제조업체 현황

경주지역의 공단(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1개, 준공업단지 1개, 지방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5개 등 모두 19개로 경주시의 규모나 인구에 비해 대단히 많은 수의 공단(산업단지)이 위치하고 있음. 지방산업단지는 12개중 7개가 현재도 조성중인 것으로 나타나, 곳곳에 소규모 공단(산업단지)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경주시의 기본정책임을 알 수 있음.

[표] 경주지역 산업단지 전체개요(경주시청 자료)

구 분	국가산업단지	준공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개수(개)	1	1	12	5

※조성완료: 5개, 조성중: 7개

[표] 경주지역 산업단지 현황

구 분	단 지 명	소 재 지	조성기간(상태)	가동 업체	고 용		
					남	여	계
국가산업단지	월 성 전 원 단 지	양남면 나아리 일원	1978~2014(조성중)	1	1,315	66	1,381
일반산업단지	강 동 지 방 산 업 단 지	강동면 왕신리 산51 일원	2010~2012(조성중)
	건 천 제1지 방 산 업 단 지	건천읍 용명리 산260 일원	1993~1996(완료)	5	292	89	381
	건 천 제2지 방 산 업 단 지	건천읍 용명리 산269-1 일원	1996~2011(조성중)	8	234	45	279
	냉 천 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냉천리 산69 일원	1997~2009(조성중)
	명 계 제2지 방 산 업 단 지	내남면 명계리 일원	2008~2010(조성중)
	문 산 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문산리 산95-1 일원	2008~2010(조성중)
	석 계 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석계리 산184-1 일원	1998~2003(완료)	31	329	35	364
	석 계 제2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석계리 산180-5 일원	2008~2010(조성중)
	외 동 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문산리 600 일원	1993~1994(완료)	21	654	190	844
	외 동 제2지 방 산 업 단 지	외동읍 문산리 산75-2 일원	1996~2009(완료)	11	278	179	457
	천 북 지 방 산 업 단 지	천북면 오아리·화산리 일원	2004~2008(조성중)	55	755	169	924
	화 산 지 방 산 업 단 지	천북면 화산리 산173 일원	1998~2009(완료)	7	151	17	168
	경주제1,2일반산업단지	황성·용강동 일원	(준공업단지: 완료)	72	.	.	.
농 공 단 지	건 천 농 공 단 지	건천읍 신평리 71 일원	1988~1989(완료)	7	438	164	602
	내 남 농 공 단 지	내남면 노곡리 1012 일원	1989~1990(완료)	3	247	55	302
	서 면 농 공 단 지	서면 아화리 110-6 일원	1993~1994(완료)	12	123	60	183
	안 강 농 공 단 지	안강읍 갑산리 576 일원	1988~1989(완료)	7	253	131	384
	외 동 농 공 단 지	외동읍 구어리 12 일원	1987~1988(완료)	5	1,166	193	1,359

※ 한국산업단지공단(www.e-cluster.net) 및 경주시청(www.gyeongju.go.kr) 2009~2010년 자료

이밖에 경주지역에는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소규모 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 있는 상황임. 경주지역의 기업체(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총 1,363개에 34,824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 자동차부품이 390개로 28.6%, 기계금속이 413개로 30.3%를 차지하는 등 금속산업이 58.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각종자료를 통해 경주지역 제조업체 총 1,024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동지역에 57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상(55.9%)이 외동을 각지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경주지역 산업별 제조업체 현황(경주시청 자료. 단위: 개, %)

구 분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비금속광물	식료품	기타	계
개 수	390 (28.6)	413 (30.3)	117 (8.6)	77 (5.6)	366 (26.9)	1,363 (100.0)
						34,824명

[표] 경주지역 읍면동별 제조업체 현황(각종 자료조사)

지 역	구 분	업체수(개)	노동자수(명)	이주노동자수(명)	비 고
감포·양남·양북지역	감포지역	5	96	.	
	양남지역	7	317	4	
	양북지역	8	102	5	
강동지역	왕신리 일원	25	594	22	강동지방산업단지
	강동 기타지역	30	922	48	
건천지역	용명리 일원	12	736	16	건천제1~제2지방산업단지
	신평리 일원	10	662	15	건천농공단지
	건천 기타지역	18	261	21	
내남지역	노곡리 일원	11	581	60	내남농공단지
	내남 기타지역	28	480	102	
서면지역	아화리 일원	19	388	56	서면농공단지
	서면 기타지역	2	132	7	
안강지역	갑산리 일원	9	426	39	안강농공단지
	두류리 일원	20	288	21	두류공단
	안강 기타지역	39	2,651	26	
외동지역	개곡리 일원	38	931	91	개곡공단
	구어리 일원 1	30	1,965	149	외동농공단지
	구어리 일원 2	96	2,246	221	구어공단 및 주변지역
	냉천리 일원	95	2,548	245	냉천지방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모화리 일원	42	977	110	모화공단 및 주변지역
	문산리 일원	98	3,820	333	외동제1~제2지방산업단지
	석계리 일원	66	1,077	134	석계제1~제2지방산업단지
	입실리 일원	28	874	70	
	제내리 일원	37	741	57	
	외동 기타지역	42	779	57	녹동리·북토리·연안리 등
천북지역	오아리 일원	50	1,012	49	천북지방산업단지
	화산리 일원	19	431	36	화산지방산업단지
	신당리 일원	29	506	27	
	천북 기타지역	36	1,205	39	동산리·모아리·오아리 등
현곡지역	현곡	32	809	38	가정리·나원리·하구리 등
황성·용강· 시내지역	황성·용강 일원	37	3,966	22	용강준공업단지
	기타 시내지역	6	137	14	
합 계		1,024	32,660	2,134	

3. 경주지역 제조업외(外) 현황

제조업의 미조직된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노동자들임과 함께 계약직·임시직 등 직접고용비정규직,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비정규직, 남품담당 특수고용비정규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조업 이외의 업체에도 어느 산업·업종을 망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09년도 경주시 통계를 기초로 각 산업별 현황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하겠음.

☉ 경주시청 인력 현황(단위: 명)

구 분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무·별정직	기능직	일반직	계	행정보조 등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계	기간제	기간제(예외)	계
인 원	31	290	1,107	1,428	72	18	177	45	312	137	409	546

☉ 관광숙박업 현황(단위: 개)

구 분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호텔수	5	1	2	3	2	13	10
객실수	1,661	270	149	182	62	2,324	.

☉ 골프장 현황

구분	경주 CC	그린 버드	디 애너스	레전드 CC	마우나 오션	보문 CC	블루 모아	서리벌 CC	선리치 CC	신라 CC	우리 CC	제이스 CC	코오롱 가든
위치	보문	양남	보문	안강	양남	보문	천북	외동	안강	보문	양남	감포	마동
홀수	18H	18H	27H	9H	18H	18H	27H	27H	9H	36H	9H	18H	8H

☉ 학교현황(단위: 개,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기타학교	계
학교수	62	44	20	20	1	3	13	1	204
학생수	2,729	16,646	9,897	10,059	2,634	23,657	1,296	137	85,715
교원	185	977	582	739	78	569	13	45	4,496
사무직원	34	176	75	105	67	254	12	14	905

☉ 운수업체 현황(단위: 개, 대)

구 분	시내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1	8	-	14	95	-	-
대수	163	446	784	181	938	318	360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단위: 개, 실, 명)

구 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한의원	계
병원수	2	10	105	9	45	1	59	232
병상수	526	1,333	328	874	.	32	.	3,093

구 분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계
인 원	334	45	60	113	515	426	266	4	1,763

☉ 보육시설 현황(단위: 개, 명)

구 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계
시설수	4	7	92	99	202
보육아동수	224	1,018	6,211	1,585	9,038

☉ 사회복지시설 현황(단위: 개, 명)

구 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계
시설수	2	14	6	1	23
생활인원	131	466	163	46	806

☉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 명)

구 분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계
시설수	1	10	3	1	12	27
현원	50	407	8	170	302	937
종사자수	12	202	10	80	54	358

☉ 식품위생업 현황(단위: 개)

구 분	다방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위탁 급식영업	집단 급식소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	판매, 운반 기타업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계
개 수	493	322	4,771	142	105	247	61	245	735	438	329	7,888

☉ 공중위생업 현황(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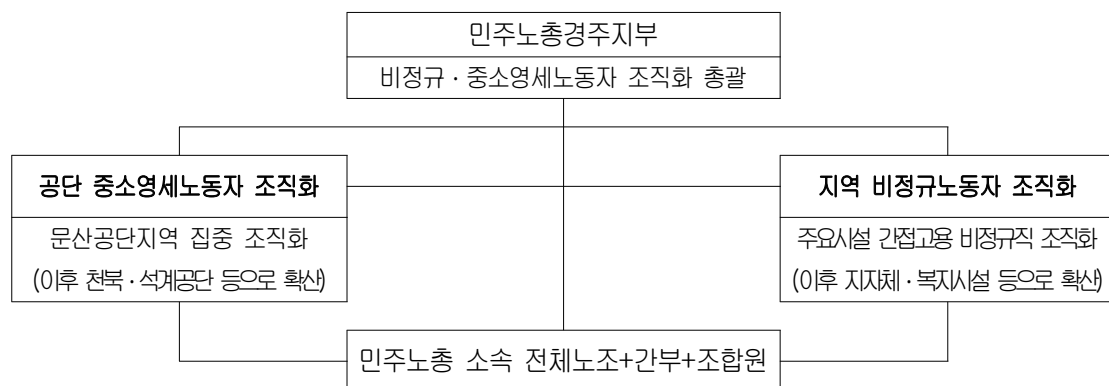
구 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계
개 수	338	97	155	548	201	47	7	3	1,396

4. 소 결 : 「공단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와 「지역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두 축으로!!

경주지역의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전략조직화는, 경주지역의 산업현황 및 노동시장 등 객관적 조건을 보았을때도 또 이를 추진할 내부 주체적 조건을 보았을때도 ▲‘공단(산업단지) 중심의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와 ▲‘지역전체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라는 두 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즉, 민주노총경주지부의 총괄하에 ▲10여개에 달하는 공단중 핵심공단을 설정해 집중 조직화를 추진하는 방향과 ▲경주지역 전체 비정규직노동자중 핵심영역을 설정해 집중 조직화를 추진하는 방향이라 하겠음.

더 구체적으로는 ▲공단지역중 가장 많은 업체와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문산공단지역(외동제1~제2지방산업단지와 문산지방산업단지가 연결되어 있음)을 1차 대상으로 집중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조직화 성과를 토대로 이후 천북·석계공단 등 다른 공단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임. 또한 ▲경주지역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있어서는 주요시설(대학·호텔·병원 등) 내의 미화·경비·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를 집중 조직하면서 이후 여타부문(지자체·복지시설 등)으로 확산하는 방향이라 하겠음.

그리고 그 조직적 결과는 주체가 형성되어 있는 ‘금속노조경주지부’와 ‘경북일반노조경주지부’로 귀결시키는 것임.



이미 시작된 민주노총의 제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조직화도, 국내산업단지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의 13만여 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출발했고, 이밖에 경기지역의 반월시화공단, 경남지역의 녹산·김해공단 및 웅상공단 등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이 추진되는 등 공단 중심의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또한 2011년 들어 서울·경기지역의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조직화를 토대로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며 고용승계보장은 물론 최저임금선을 돌파한 바 있고, 경남도청 무기계약직, 공주시청 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IV. 조직화 계획 :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제2기 전략조직화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10단계로 전략조직사업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 이전의 한계를 극복한 내용이기때, 경주지역에서도 많은 부분 이를 참조하고자 함. (다만 현시점에서 전체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여기서는 사업의 전체개요와 2011년을 중심으로 한 초기계획을 제출하고자 함.)

[표] 지역단위 중소기업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단계

○ 초기단계	1. 대상지 선정 및 실태 파악
	2. 조직화를 위한 체계 구성
○ 지역 기반을 다지는 단계	3. 초동주체 조직화
	4. 대중적 접촉면 넓히기
	5. 지역에서 공신력 갖기
	6. 지역에서의 연대단위 형성
○ 투쟁과 조직 단계	7. 대규모 집단 조직화
	8. 집단 투쟁 의제 발굴
	9. 지역협약 쟁취
○ 안정화 단계	10. 지역협약 쟁취 이후 노조활동의 방향

※ 『중소영세 노동권보장을 위한 매뉴얼-민주노총 전략조직화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 2011년)

1. 조직화사업 개요

앞서 조직화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개별사업장 조직화가 아닌 ‘집단적 집중조직화’의 방향이고, 따라서 단기적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그 조직화 대상에 있어 한곳에 집중(올인)하면서 승부를 보는 조직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선정한 공단별·비정규직 유형별 집중조직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기때, 1차 조직화에는 짧게는 1년에서 길어야 2년을 넘지않는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최소 1~2년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조직화사업 개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 기	2011년(5월~12월)	2012년(1월~12월)	2012년(1월~4월)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체계 구성 조직담당자 구성 및 훈련 선전홍보+상담+방문사업 현장 초동주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전홍보사업 지속 현장 초동주체 조직 모임 현장 초동주체 교육훈련 집단조직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전홍보사업 지속 집단조직화(노조로 조직) 지역 교섭 및 투쟁 전개 2차 조직화사업 준비

2. 조직화를 위한 준비사업

① 사업체계 구성

- 취 지 : 중장기적으로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담당할 상시적 조직체계로서 요구됨.(전담 조직활동가 구성이 어려운 조건에서 전 조직적으로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함)
- 명 칭 : 민주노총경주지부 '비정규·미조직 특별위원회'(약칭 '미비특위')
- 구 성 : <기 획 팀> 민주노총경주지부 담당+각 조직별 담당 등 4~5명으로 구성
<조직담당자> 미비특위 위원으로 조직화 사업에 주1회 이상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소속노조 간부 10여명으로 구성
<현 장 지 원> 현장에서 결합가능한 인원으로 특히 집중 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는 노조의 간부+발레오만도 해고동지 등
- 시 기 : 2011년 5월중 구성 완료
- 운 영 : <기획팀 회의> 격주 1회 개최(세부 사업기획 및 집행, 평가·점검 등)
<전 체 회 의> 매월 1회 개최(진행사항 총괄 점검·평가·계획 등)

② 조직담당자 교육·수련회

- 취 지 : 조직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함과 함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기초를 마련함.
- 대 상 : 미비특위 위원(조직담당자) 전체+현장 노조간부
- 시 기 : 2011년 5월말~6월초 1일 수련회 혹은 1박2일 수련회
- 내 용 :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
타 지역·업종 조직화 사례
기초 노동법 교육(근로기준법·최저임금·노동안전 등)

③ 지역 토론회

- 취 지 : 그동안의 경주지역 비정규·미조직 사업에 대한 진단·평가와 전략조직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전 조직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시 기 : 2011년 6월중순경(18:00~20:00)
- 내 용 : <주 발 제> 경주지역 비정규·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계획
<보조발제 1> 금속노조경주지부 조직화 사업 평가와 계획
<보조발제 2> 경북일반노조 조직화 사업 평가와 계획
<토 론 자> 민주노총경북본부, 현장 대표자(업종별), 지역단체 등

④ 실태조사 사업

- 취 지 : 조직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올바른 조직화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됨.
- 내 용 : 기초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종별·공단별 구체적 조사
 <예 1> 문산공단 → 사업체현황, 노동자수, 업종별·규모별 분포, 공단지도 그리기 등
 [공단의 경우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어 모두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조건이기에 조직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면접 설문조사의 어려움 존재. 이로인해 구체적인 임금 실태·노동조건실태·생활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예 2> 간접고용 → 최저임금 설문조사 혹은 기초실태조사표 가지고 방문조 비정규직 사 가능함.[조직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
- 시 기 : <기초 자료조사> 본격 조직화 사업 추진이전인 2011년 5월말까지 완료
 <설 문 조 사> 면대면 조사 등 조직화 사업과 연계해 진행
- 기 타 : 면접 설문조사 및 기초실태조사표에 응하는 노동자에게 선물 지급 등

⑤ 조직화 사업 설명회

- 취 지 : 전 조직적 공유와 결합하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소속사업장 및 지역 단체 설명회 필요함.
- 내 용 : 조직화사업 취지 설명 및 의견수렴, 결합방안 모색 등
- 대 상 : <소속 노조> 1차 집중조직화 대상지역 노조 간부(확대간부회의 설명)
 <지역 단체> 민주노동당경주, 여성노동자회경주 등 지역단체
- 시 기 : 2011년 6월중 실시

3. 조직화 기초사업

① 조직화 캠페인 주요의제 설정

- 취 지 : 초기 사업은 공중전(선전·홍보 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바 조직화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의제 설정할 필요 있음.
- 활 용 : 주요의제에 따른 상담 및 현수막, 선전물 등에 적용

- 내 용: <최 저 임 금> 민주노총 요구를 중심으로 2011년 6월말까지 집중
 <근로기준법>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20인미만 2011. 7월 시행)
 퇴직금 적용(5인미만 2011. 12월부터 부분적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기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 동 안 전> 노동자 건강권(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노 동 조 합> 노조결성 및 가입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보장, 단속추방반대 등
 <기 타> 해당지역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회제
 해당 공단·업종에 맞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용역의 문제 등

② 선전·홍보 사업

- 취 지 : 초기사업은 조직화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선전·홍보 캠페인 필요
- 준 비 : <현수막> 게시용 최소 10개~15개, 이동용(대형) 3~4개
 <포스터> 500장(공단 도배, 훼손대비 여유물량 제작)
 <피 켓> 기본 20개(기본 참가자 고려, 내용은 3~4개 주제로)
 <몸벽보> 기본 20개(기본 참가자 고려)
 <선전물> 매월 다른내용으로 1,000부씩 제작
 <방 송> 선동용 및 노동가 가능 앰프
 <명 함> 1,000매(주체, 내용, 주소, 연락처 등 명기)
- 출퇴근 → 시간 : 출퇴근시간(07:30~08:30)
 선전전 → 진행 : 선전물 배포 어려우므로 공단입구 현수막·피켓·몸벽보 선전전
 → 주기 : 매주 1회 정기적·지속적 실시
 → 참가 : 조직담당자 및 주변지역 노조간부
- 거 점 → 시간 : 중식시간(12:00~13:30)
 선전전 → 진행 : 공단내 공동이용 식당입구 선전물 배포(피켓·현수막 등 결합)
 → 주기 : 매주 1회 정기적·지속적 실시(출퇴근 선전전 있는 날 병행 실시)
 → 참가 : 조직담당자 및 주변지역 노조간부
 → 기타 : 탁자·의자 준비해 거리상당 병행 실시.(권리수첩 배포)
 면접 설문조사 병행 실시여부 검토.(설문 선물 준비)
- 방 문 → 시간 : 중식시간(12:00~13:30)
 선전전 → 진행 : 지역 주요시설 간접고용 비정규직 방문.
 (2명 1조로 사전 휴식장소 등 파악해 방문해야 함)
 → 주기 : 매주 1회 정기적·지속적 실시
 → 참가 : 조직담당자 및 주변지역 노조간부.(소수인원)

4. 사업추진 일정(2011년)

구 분	2011년 상반기(6월말까지)	2011년 하반기(7월~12월)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사업계획 수립 ■ 조직화 사업체계 구성 ■ 조직담당자 교육·수련회 ■ 지역 토론회 ■ 실태조사(기초자료조사) ■ 조직화사업 순회 설명회 ■ 공단 최저임금 선전전 ■ 지역 최저임금 방문선전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주1회 출퇴근 선전전 ■ 공단 주1회 중식시간 선전전 ■ 공단 거리 상담사업 ■ 지역 주1회 방문 선전전 ■ 조직담당자 교육(필요한 교육실시) ■ 현장 초동주체 훈련계획 수립 ■ 현장 초동주체 발굴

5. 소요 예산안(2011년)

항 목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선전사업비	선전물	월1회 300,000원×6회	1,800,000
	현수막	소형 (30,000원×15개)+대형 (50,000원×4개)	650,000
	포스터	대형 500장	500,000
	피켓	1개 10,000원×20개	200,000
	몸벽보	1개 3,000원×20개	60,000
	명함	공용 1,000매	30,000
교육사업비	조직담당자 교육수련회	(15명×30,000원)+강사비 200,000원	650,000
예비비	예비비		300,000
합 계			4,190,000
기 타	(조사사업비)	(면접 설문조사 통계 및 설문자 선물)	(1,800,000)
	(선전전 식대비)	(20명×5,000원×월4회×6개월)	(2,400,000)
합 계			(8,390,000)

※ 소요예산은 민주노총경주지부 및 금속노조경주지부 비정규·미조직사업비에서 지원

80년대 민주노조 운동에서 산별노조운동의 조직화전략을 보다

민길숙(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3,341건의 노동쟁의가 발생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1,740건, 운수업 1,247건이 발생되었다. 이중 1,000인 이상사업장에서 61% 500인 이상 사업장이 32%였다. 이때 당시 조합원 수는 105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22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엄청난 수로 폭발적으로 조직화가 이뤄졌다. 전략조직화사업담당자 입장에서 당시 어떤 요인이 조직화로 이어졌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대학생 운동권들은 노동자들을 일깨우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정부통계이기는 하지만 당시 서울에만 181명, 부산 40명 등 전국 699명의 학생출신 활동가가 공장으로 들어갔다는 통계가 있다. 85년 구로동맹 파업 사업장 중 하나였던 효성의 경우 노동자 700여명이었는데 이중 학생출신이 8명이었다고 한다.

80년대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에 투신했고, 이들은 선진노동자들과 결합해 기업별노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초기업적 연대조직을 출발시켰다. 이러한 활동들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준비했다고 본다.

전략조직화사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7년 이후 20여 년간 기업별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확대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주노조운동진영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간부는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80년대 1만여 명의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의 수보다는 많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도 꽤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산별노조운동을 시작하며 목표했던 바에는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꽤 했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했다. 그런데 조직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보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애초 80년대 현장에 들어갔던 수많은 활동가들과 20여년의 노조활동 속에서 양성된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은 그들이 해왔던 노조활동 속에서 꾸준히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조직된 노동자들과의 노조활동에 익숙해져있는 듯하다.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오면 조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보려고도 하고 활동가를 양성해 산별조직에서 미조직사업을 해보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아직은 내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만 꺼내보자면, 조직 확대라는 목표를 민주노총이든 산별노조이든 사업에서 무게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별로 전략조직화사업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사업담당자에게 맡겨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백 명의 활동가가 스스로 현장에 들어가고 조직화를 위해 논의하고 연대투쟁을 만들어갔던 80년대 당시의 활동과 견주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조직은 체계화되고 사회적 비중도 커졌지만 조직 확대를 위한 전략조직화사업은 담당부서에 맡겨두고 있는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앞서지 못하고 있다. 조직 전체의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략조직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 활동가를 양성해 배치했던 1기 사업과 사업단위를 선정해 지원하는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느 방식이 맞는 가라는 토론은 소모적이라고 본다. 80년대처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직이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조직 확대를 하지 않고 기조직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한 활동을 하는 노조는 민주노조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면 동의한다. 조직 확대를 하기 위해선 대상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을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고 쟁취하기 위한 노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조직된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바로 조직 확대사업이야 말로 민주노조가 비정규직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략조직화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조직화 방식에 있어 고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조직화를 하기에 앞서 우선 교육하고 토론해 어떤 노조활동을 할 것인지 인식하고 계획한 뒤에 노조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자의식이 투철한 것은 아니다. 조직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스스로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 우선하기에 조직되면 조직된 노동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조활동을 왜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전략조직화사업은 노조가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교육하고 선전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연대성,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조직 확대를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단위는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지역지부들이다. 가끔 지역지부들은 부족한 인력과 재정 때문에 산별노조가 조직 확대를 지역지부에 위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여전히 산별노조나 민주노총의 사업이 현장에서의 조직 확대사업과 연결되지 않기에 이런 고민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본다. 산별노조운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조직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전 조직적으로 조직 확대를 위해 모든 조직들이 새로운 전략을 전조직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비정규 전략조직화와 조직문화 혁신

“총연맹부터 조직화 전략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직선제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

- 직선제가 성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비정규직 투쟁&조직화 관련해서도 조직 내 분위기가 확 바뀔까.
- 민주노총의 현 조건에서 직선제가 공약을 넘어 노동자 직접민주주의를 표상하는 최우선적 과제로 조합원들에게 인식되고나 있나? 현장 조합원들은 큰 관심이 없는데 활동가/정과 중심의 논의 구도 속에서 시끄러운 직선제 논란 구도 자체가 그 한계와 문제점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 직선제로 선출된 지도부가 비정규직 의제를 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투쟁하고 미조직 조직화에도 열성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의 근본 사업 방향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십수년 지도부가 누구건간에 비정규 사업을 0순위로 늘 제창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뭔가.
- 직선제 논란 한편에 계급조직으로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가장 집중해서 조직적 논의를 벌여야 할, 하반기 노동자투쟁의 향방을 가름할 핵심 사안인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선 실제 노동시민단체들보다도 더 관심의 밀도가 엷음.
- 따지고 보면 대선 투쟁도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전선동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투쟁 전략이 될 것임. ‘노동 있는 복지’라는 주장만큼 ‘노동 있는 대선’을 만드려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군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함.
- 직선제나 정치방침처럼 ‘전략’조직화를 화두로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형성돼 토론해본 적이 있나.

2.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꼭 필요하다’

- 노동운동의 총체적/전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
- 비정규직 1천만!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고 분절화, 중층화된 노동시장 양극화 시대 대기업, 공공 부문 정규직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는 계급 대표성 회복 불가
-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 편재돼 있는 조건에서 이 미조직 노동자군을 조직하지 않고는 정규직 고용안정조차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움
-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설 당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도 초동 단계에서 정규직 노조 등 외곽/외부의 지원 없이는 조직 보전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의 자원을 목적의식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는 비정규직, 중소기업사업장, 이주노동자 조직화는 요원하

거나 불가능함

- 노조의 힘 = 쪽수+조직력(전투력)인데 이미 전체 노조운동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가진 계급 주체는 미조직 비정규/중소영세/이주 노동자들이므로 이 미조직군을 집중 조직화하는 것은 당연하면서 중차대한 과제이자 목표임.
- 민주노조운동이 한국 사회의 올바른 변혁을 추동할 사회 세력으로 기능하려면 사업장 안의 임금인상/사내 복지 신장 중심 입단협 활동만으로는 불가

3.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총평

-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건 잘한 일이지만 현재 2기까지 진행된 사업 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으며 호평하기 어려운 난감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산별 나눠먹기란 혹평을 받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1기 전략조직화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를 목표로 출발한 2기의 경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평가의 딜레마가 발생함.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지역공단 조직화로 가장 전략조직화 의미에 부합하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비롯한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반면, 거대 단일 사업장에 가까운 인천공항과 유통서비스 조직화사업은 의미있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 이는 각 지역본부와 산별 단위가 가진 조직화 동원 자원의 편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 각 사업 단위의 전략조직화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장 조직화나 업종조직화에 비해 지역조직화가 갖는 객관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임. 조직화 자체가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는 일반노조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난관이 많은 사업이므로 똑같은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분명함. 결국 각 단위의 조직화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함.

- 인천공항사업의 경우 작년에 비해 전략조직화의 성패와 직결된 여러 가지 요인을 잘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조직화 관점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전국공항 조직화 전략의 선도적 부분 사업으로 인천공항 선정과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공항 유지운영 노동자들을 애초부터 전략조직화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부로 편제한 것, 4개 부문 조직화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전과 조직화 노력, 현장노동자회 구성과 체계적 교육 등 현장주체 양성 과정, 독자적인 선전물인 '우리도날자' 발행, 현장 토론과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고용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집약해낸 조직적 과정, 인천세관 투쟁을 주요한 공항조직화 계기로 보고 세심한 투쟁전술 구사로 승리로 이끈 과정, 조직화 전담자 배치 등 공공운수연맹/노조의 공항 조직화에 대한 한방향 정렬 지원 체계 구축, 올해 하반기 정규직화 투쟁과 '삶바(삶을바꾸는)' 캠페인에서 내년 5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밀그림, 총연맹 시월비정규투쟁과 연계한 조직화 사업 배치에서 볼 수 있는 전략적 관점 등 전략조직화의 시금석이 될 만한 성과가 확인됨. 현재의 체계와 인적 구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공공연맹/노조의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인천공항 현장대중투쟁을 통한 대거 조직화가 실현된다면 민주노총 전체 전략조직화 사업에 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진행된 전략조직화 사업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총연맹의 전략적 마인드 부

재임. 여전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 ‘전략’ 사업의 의미가 거의 유실됨. 전략이란 1)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 집중하겠다는 의미, 2) 조직이 가진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겠다는 의미, 3)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사업으로 일관된 목표와 방향, 기조를 유지해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미인데 2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대단히 취약하거나 부재함. 전략조직화 두뇌인 총연맹의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역할과 비효율적이고 관성적인 실무집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전략조직화 성과를 기대하기가 난망함.

- 총연맹-산별-지역본부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조직화사업의 핵심주체가 누구인지, 사업 관련한 책임소재도 모호함. 특히 전략조직화에 걸맞는 산별 조직과 지역본부 양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산하 기초 조직의 결합이 조직적으로 성과있게 진행되지 못함. 조직 전체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동원한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해 총연맹-산별-지역본부까지 사업 담당자가 고군분투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결국 관성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

- 기금을 모으는 과정도 지난했지만 기금 집행 과정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함. 예정된 사업 집행을 제대로 못해 기금 집행이 목표에 미달된 곳이 많고 심지어 사업평가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많음. 이는 핵심 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후 사업 중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4. 향후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에 대한 제언

- 2기와 관련해선 이미 핵심 사업과 주요 지원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돼 왔으므로 원점에서 평가하는 건 무익하고 현재의 조건에서 전략조직화의 의미를 잘 살리는 방식과 내용으로 지역본부와 산별이 성과있게 조직화 사업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민주노총의 전략 사업인 만큼 엄정한 기준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 이런 점에서 해당 조직화 주체들로선 좀 거칠고 서운하다고 받아들일 만한 평가 결과도 있겠지만 민주노총 중앙 사업으로서의 전략조직화 위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됨.

-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제언한다면 가장 먼저 총연맹부터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인식해야 함. 기존의 관성과 사업 작풍을 혁신하지 않고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현재 1인 실무 전담 체계로 중소영세 사업장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를 총괄하고 집행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는 전략조직화 사업에 총연맹이 가진 관심과 비중을 반증하는 것임. 전략조직화 사업이 구두선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위원장 또는 비정규 사업 담당 임원이 조직의 미래가 걸린 최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수미일관되게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지도해야 함. 특히 비정규 조직화(&투쟁) 관련한 사업에서 말 따로, 행동 따로, 결정 따로, 집행 따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체 조직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자원 집중이 이뤄져야 함.

- 전략조직화 성패는 집중과 선택에 달려 있음. 조직화 대상을 여러 곳으로 나눠먹기 하지 말고 한곳, 또는 한 영역과 부문을 특정해서 원포인트로 집중해야 함. 그럴 때 총연맹 직할 체제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효율성과 사업에 대한 관장력을 배가할 수 있음. 총연맹 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전략조직화 센터를 구성하고 해당 산별과 지역본부에 반상근 이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전략조직화 담당자를 두고 유기적 사업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조직 체계와 전략조직화에 결합할 활동가 그룹, 기획 및 정책 지원 전문가 그룹을 네트워크로 묶어 전략조직화 센터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 오세용 동지가 강조한 이주노동자 조직화도 집중해야 할 전략조직화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봄.
- 전략조직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으로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업장과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비정규직 관련한 현장 실천을 하는 날(비정규직 연대의 날?)을 정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 교육과 선전을 동반한 1인 1실천을 조직화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비정규 관련 사업 예산과 전담 인력을 최소한 30%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중기 계획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비정규직 관련 사업과 예산 증대가 주장과 구두선으로 그치면 어떤 조직문화 혁신도 기대할 수 없음.
- 평가위원들이 때 되면 해당 조직화 주체에게 사업보고와 계획을 제출받고 일괄해서 불러 간담회를 하고 평가위원 토론을 거쳐 평가결과를 집약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임. 각 사업 단위 조직화의 복잡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평가위원들이 각 조직화 사업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토대로 현장 방문과 사업 결합 등을 통해 평가가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체적인 평가 대안으로 이후엔 평가위원별 할당제를 시행해 좀 더 책임있고 실질적인 평가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임영국(전국화학섬유연맹/노조 사무처장)

1. 웅상전략조직화사업 특성

1 제조업 영세사업장 밀집공단 조직화 사업

- ✓ 웅상지역은 전형적인 제조업 영세사업장 밀집 공단
- ✓ 영세사업장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 기업단위를 넘어선 지역사회적 차원의 조직화 방식 고려 (공단에서는 보거나 만날 수 없는 공단노동자들)

2 건강권과 연계한 노동조합 전략조직화 사업

- ✓ 유해물질정보제공과 노동자 건강권, 그리고 조직화
-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적 역할과 위상 제고

사업단 구성

-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양산시지부
- 희망웅상(웅상노동상담소, 양산노동상담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2. 주요 사업 현황

1 공단에서 채취한 시료 25개 중 11개(44%)에서 발암물질 또는 독성물질로 확인

구 분		제품수(개)	비율(%)
발암성물질 함유 제품	발암성 1급	1	4.0
	발암성 2급	3	12.0
	발암성 3급	4	16.0
	소 계	8	32.0
발암성은 아니지만 생식독성 등 기타 우려물질 함유 제품		3	12.0
발암성물질 및 기타 우려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14	56.0
합 계		25	100.0

❖기타 우려물질이란?

유럽의 REACH에서 고위험우려물질(SVHCs)로 구분하는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암독성, 환경호르몬, 잔류독성 및 동등위험성 물질을 의미한다.

2. 주요 사업 현황

2 지역사회 여론화와 의제화 추진

◆ 5/23일 양산 토론회

- ‘발암물질없는 안전한 일터와 양산 만들기’
- 주최, 주관 : 양산시의회, 웅상사업단
- 지역시민사회단체, 양산시의회, 노동조합 등 60여명 참석
- 발암물질없는 현장과 지역운동의 필요성 등 공유

◆ 조례제정운동 추진

- 발암물질 함유 세척제 사용금지(대체노력 지원)조례 제정
- 웅상지역을 넘어 양산시 차원의 실태조사 사업으로 확산
- 경남도 차원으로도 확대 추진 계획

2011' 유해물질 정보제공 캠페인 사업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웅상지역만들기



일할 맛나는 웅상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 시간 : 5월부리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장소 : 웅상별100리, 약계사거리, 산부인병원, 천성아파트앞 (지하차도) 교차로에 설치

“ 절삭유, 세척제, 신너,
왁스, 파라핀, 아세톤도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건강상담, 노동법률상담도 함께 제공!

대 발고삼의사면? ☎ 055-386-8575



세척제, 신너, 리무버, 이영제의 성분(발암성)을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샘플 용기에 시료를 가득 담아온다
- 아래 제품정보(4가지)를 적어온다
- 샘플용기는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055-386-8575)



- 제조회사 :
- 등록상표 :
- 사용용도 :
- 시료채취일 : 월 일

안전한 현장! 건강한 노동자! 일할맛나는 용상!

3. 향후 주요 사업계획

1 지역사회 여론화와 의제화

- 조례제정(세척제 대체노력 지원조례) 및 지역협약 추진
- 지방정부를 통한 발암물질 사용실태 전면 조사
- '발암물질없는 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
 - 정례적 캠페인과 조례제정 서명운동
 - 발암물질없는 노동현장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선언 조직

2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 조직노동자 및 지역사회 주체역량 대상 교육
- 미조직노동자, 주민 대상 열린강화를 통한 주체 발굴 사업

3 제조업 공단사업팀 네트워킹과 공단신문 준비

- 영세사업장 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 발암물질 없는 현장과 지역사회 만들기 소식 등
- 영남권 제조업 공단사업팀 네트워킹 매개 역할 기대(?)

4. 조직화 전략, 왜 건강권이었던가?

공단 전략조직화사업 기조와 방향에 대한 고민

- ◆ 영세사업장 조직화 → 기업을 넘어 지역단위로
- ◆ 사업내용도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지역생활에 뿌리내리는 꾸준함
- ◆ 영세사업장노동자 근로조건과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을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접근방식을 고려하였음.
- ◆ 노동조합의 지역사회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조직화 성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처지와 현실을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풀어가려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웅상전략조직화사업단은 2010년 사업 시작 초기 사업단 명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강권과 복지”를 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사업의 주요 사업기제로 하기로 하였음.

➢ 명칭 : 웅상지역 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5. 과제

1 사업주체 역량 확대강화의 한계

- ✓ 지역사회단체와 보다 충분한 사업공유와 주체 강화에 한계
- ✓ 특히,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조직화 !! 여전히 그것이 문제

- ✓ 노조의 지역사회 개입의 궁극적 목표는 ‘조직’
- ✓ 웅상사업과 조직화의 연결고리 → 새로운 계기점이 필요
- ✓ 노동조합 조직화 방식과 경로에 대한 다양한 고민?
- ✓ 다양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확대 강화가 관건

[별첨]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추진 현황과 전망

채근식(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1. 민주노총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 약사

2000년 이전: 지역본부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진행
2000년: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설치·비정규조직화사업 본격화(특별기금 조성 결정)
2002년: 총연맹 중심사업과제로 비정규직 조직화 선정,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2003년: 5개년 전략조직화사업계획 수립·추진 결의 (유통서비스·공공서비스·건설일용·특수고용·사내하청을 5대 조직화 대상부문으로 선정/90명의 조직활동가 배치사업 추진)
2005년: 조합원 1인당 1만원씩 모금 50억원의 조직화사업기금 조성사업 대의원대회 결의 (50억 기금 조성에 기반해 민주노총 비정규조직센터는 총 51명의 조직화 전담 활동가 양성하여 5대 전략부문에 투입 계획)
2006년: 민주노총 조직활동가학교 운영 (23명 활동가 배출 및 유통서비스·공공서비스·건설일용의 3개 부문과 1개 지역본부에 배치, 산별노조 전환)
2009년: 1기 전략조직화사업 완료
2010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주체 선정(중소영세미조직비정규 조직화, 2010. 10. 12 중집의결)
2011년: 2기전략조직화 전역화 (총 11개 가맹산하조직-13개 전략조직화사업 선정/추진)
2012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 압축 선정(총 5개 사업 진행)

2. 전략조직화 2기 사업방향과 과제

1) 전략조직화 2기 사업계획 제출 배경

○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결의. 50억 기금 모금과 함께 신규 조직 활동가 양성·배치 사업이 2009년 8월 6일 마무리, 전략조직화 사업 완성을 위해 2009년 1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 2기 사업계획 제출, 2010년 11월 2기 전략조직화사업 착수

2) 1기 사업에 대한 약평

○ 주요 성과: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내부에서 미조직·비정규 운동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가맹산하조직이 미조직·비정규 사업에 보다 많은 인적·물적 역량 배치에 노력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었음. 15명의 조직 활동가를 남김
○ 주요한 한계와 문제점: 첫째, 50억 기금모금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둘째, 각 단위로 배치된 조직 활동가에 대한 관장 시스템이 없었음. 조직 활동가에 대한 점검 및 훈련이 가맹조직과 각 개인에게 맡겨짐. 이는 활동가를 각 연맹으로 배치한다는 결의 그 자체의 문제로부터 연유. 조직 활동가들을 총연맹 직속으로 운영했어야 함. 셋째, 사업체계 구축, 조직문화

환경개선, 사회연대 확장 차원에서 많은 점이 부족함. 넷째, 조직화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3) 2기 사업 방향과 과제

○ 전략조직화 2기 사업 방향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 첫째, 민주노총 조직문화 혁신. 미조직·비정규 조직사업은 노동조합 본연의 과제임. 담당부서만 하거나, 몇몇 산별 또는 일부 사업장만 하는 사업이 아님. 따라서 총연맹으로부터 가맹조직, 지역본부, 단위사업장까지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내면화하고 일상화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함. 그것을 위해 기존에 결의한 인력과 재정집중, 사업체계 구축, 조직문화 환경개선, 사회적 연대확장 등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점검 독려함

○ 둘째, 조직화의 대상을 5대 핵심영역에서 중소영세(여성, 청년, 이주, 장애인)노동자로 확대. 89%의 노동자가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속해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의 조직률은 3% 남짓에 불과함. 이들에 대한 조직화 없이 민주노총 및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률 확대는 불가능함. 한편 이들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적극 연대해야 할 대상임

4) 전략조직화 2기 사업 시스템 및 기금운용방안

(1) 2기 사업 시스템

- 전략조직화 2기 사업 기획·집행·점검 단위로 조직사업단 구성함
-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이주 활동가를 초청하여 진행함

(2) 기금 활용방안

- 조직사업단 운영비로 사용
- 각 산별과 지역본부의 중소영세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사용
- 이주 활동가 초청에 사용

(3) 조직사업단 구성 및 역할

- 조직사업단 위상은 전략조직화 2기 사업 기획 및 집행, 점검 단위임
- 조직사업단은 총연맹 미비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역할은 첫째, 민주노총의 조직문화가 미조직·비정규 사업의 내면화와 일상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집행·독려함. 둘째, 50억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각 산별과 지역본부의 중소영세노동자 조직사업을 점검하고 독려함

5) 산별과 지역본부의 중소영세노동자 조직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 가맹산하조직(일반노조 포함)에서 진행하는 중소영세노동자 조직사업에 기금 지원함. 지원 기간은 집중사업은 3년, 지원사업은 1년(사업종료 이후 재평가 및 선정)으로 하고 반기별로 사업지속여부를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총연맹 미비실이 사업평가보고서 제출

○ 가맹산하조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단위의 기존 미조직·비정규 사업을 뛰어 넘는 새로운 결의와 집행을 동반함. 예) 해당 가맹산하조직에서의 미비기금 설치와 운용, 해당 사업에 대한 산별 차원의 추가 지원 등

6) 이주노동자 활동가 초청

- 2명의 이주활동가를 2년간 초청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 교육, 선전사업 계획

3. 2기 전략조직화사업 선정 평가 기초

1) 중심 기초

○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사업장, 비정규사업장 조직화와 가맹산하조직들 간의 전략조직화 공동사업 추진 여부 등. 공식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공유한 심사항목 범위는 ▲가맹-산하조직 간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 ▲미조직-비정규 전담인력 배치 여부 ▲지역연대사업 실천여부 ▲전략조직화 대상 현황(대상의 상징성과 파급력, 정세 부합성), ▲조직화 사업 의미(사업장 단위를 뛰어 넘는 연관정도), ▲해당 지역(산업) 조직화사업 경과와 준비정도(유관 조직노동자의 규모와 조직력), ▲축적된 사업경험 여부 등

2) 평가 원칙

○ 제출된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방문 등을 통한 타당성 심사, 내·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화 심사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계량적 심사 기준과 지표에 의한 심사(평가) 진행

3) 평가 항목

범위	항목
(1) 총연맹 사업지침 준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기전략조직화사업 목표와 이해의 적절성 - 산업구조 중심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작성양식 준수
(2) 조직화 대상과 권역의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연맹 사업구조와의 일치성 - 추진 사업의 정세 부합성 - 적정 조직화대상 분포(조직대상 설정의 적절성) - 사업 파급력
(3) 지역 공동역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가맹조직 공동사업 추진+전담조직기구 구성 - 광범한 (사회운동조직과의)지역연대체계 구축
(4)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자체 비관활동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연도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실적 분석
(5)사업 적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초동주체 형성에 대한 상세계획 마련 - 대중적 주체형성을 위한 고민과 기획 - 사업방향과 조직화 발전방향의 적정성 - 사업분산과 중복 억제 (분산재정과 인력집중화) - 법·제도적 환경의 불리함에 대한 극복 대안 - 사용자 측의 반노동전략에 대한 극복 대안 - 조직화 연구활동, 지부차원의 조직배치 - 단계별 교육/훈련 계획

(6)조직 책임성/역할 평가	- 조직적 사업 전개 가능성 - 조직 인적 자원 집중투입과 배치
(7)사업 지속성 평가	- 지도부 교체에 따른 사업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 - 사업 지속성 담보 방안 - 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 원칙과 방식 - 전략조직화사업단의 자율성, 독자적 사업추진

4) 기타 - 사업선정 후 가맹조직+산하조직 전략조직화공동사업단 구성

- 전략조직 공동사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조직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기획-논의-집행-평가 기본단위로 함
- 전략조직 공동사업단은 △해당 지역본부 △전략조직 대상 가맹조직의 지역본부(지부, 협의회) △총연맹 미비실을 필수 단위로 하고, △지역 비정규 운동단체 △지역 인권단체 △지역 법률단체 △진보정당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해당 가맹산하조직 미조직비정규 담당 임원과 총연맹 미비특위 임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지역본부 미비사업 담당자가 집행책임을 맡음
- 해당 지역본부 산하 미비특위 등과 같은 지역 내 가맹조직과 일반노조 등의 참가 독려
- 전략조직 공동사업의 유실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전략조직 공동사업 기간 동안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담당자 역할 유지
- 총연맹 미비실 내부에 전략조직 공동사업 기간 동안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4. 2012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 추진현황(상반기 사업집행+하반기 계획)

1) 상반기 사업집행 현황

- (1) 집중사업(2): 가맹조직 1곳-공공운수연맹 공항지역전략조직화사업 / 산하조직 1곳-서울본부 서울남부지역전략조직화사업(공단)
- (2) 지원사업(3): 가맹조직 3곳-건설연맹 CRC조직화사업, 서비스연맹 대형유통·할인점노동자조직화사업, 화학섬유연맹-웅상지역조직화사업(공단)

[표1] 2012년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상)반기 사업추진현황(2012.1~6월)

조직	사업명	2012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공운수연맹	공항지역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노동자 조직화: 4월 인천공항승강기 유지보수 노동자들 노조 가입. 인천공항지역지부 승강설비지회 신설, 5월 탑승교 유지보수 노동자들 노조 가입.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설비지회 신설, 5월 공공운수노조내 항공지부 신설. 델타항공지회, 김포공항 청소지회 가입. 김포공항 국내선, 국제선 청소환경미화노동자(두레크린) 조직화 추진(국내선/국제선) ● 부문별 조직화: 항공산업단위 조직주체간 논의체계 구축(아시아나항공지부를 중심으로 외항사 승무원/정비사 등 조직화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운송노동자 조직화: 6월 화물연대 투쟁을 기점으로 300여명 노조 가입 • 건강권 캠페인: 공항노동자의 건강실태 발표, 건강권 공청회 후 후속대책 및 감시단 구성 • 조직활동가 전략조직화 활동: 지역별/부문별 조직활동가 모임 • 노조민주화 및 조직확대: 아시아나항공지부 노조탄압 대응 및 조직확대 • 선전: 인천공항 공항신문 '우리도 날자' 지속 발행, 부문별 특화된 선전물 제작/배포-화물연대 전략조직화사업용 '반갑다 화물연대' 리플렛 30,000부 제작 배포 • 교육: 미조직사업장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 인천공항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열린강연회, 전략조직화사업 단위 역량 강화 교육,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 등 • 정책: 인천공항 간접고용노동자 건강실태 조사, 공항공사 간접고용노동자 고용형태 전환을 위한 연구, 직접고용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워크숍 및 공개토론회 개최, (정치사업)노조 중앙차원에서 각 당 정책위와 정책 협약 체결 등 추진 • 상담: 무료노동상담사업 지속 • 투쟁: 인천공항세관분회 투쟁 진행(세관분회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추진-1월 세관분회 투쟁 통해 간접고용노동자 업체변경시 고용유지, 인건비 100%지급을 아웃소싱 용역계약 체결 조건화)
서울 본부	남부지역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열린시민강좌 진행(조직노동자/미조직 노동자 대상) 상담활동가 교육, 현장활동가 교육, 현장조합원 간담회 실시 • 선전: 공단선전전 매주 실시, 광장사업 선전전 진행, 무료노동이제그만 소책자(32,000부), 차별철폐대행진 및 노동자의미래 소개(7,000부), 최저임금(3,000부)제작/배포, 거리 현수막 부착(확보된 연락처 통하여 3월 시민 강좌부터 사업 안내 문자 및 우편물(바지락, 강좌안내, 회원카드)발송, 홈페이지 관리(노동자의 미래 카페, 트위터/ 산악회모임 카페) • 조사: 공단지역 실태조사결과 발표-한겨레신문 기획기사 게재 • 상담: 전화상담 및 내방 상담 진행(임금체불, 무료노동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 집단상담 증가와 사건화로 이어지는 상담 증가, 조직결성에 대한 문의, 택시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등) • 조직화: 집단상담에 따른 조직화 시도, 씨엠비택지회 금속노조 가입(173명) • 일상활동: 소모임구성(기타반, 산악회, 풍물반) • 정책: 남부전략 조직화 사업을 위한 지역 토론회, 현장활동 참가자 평가회, 공단 실태조사 발표 워크숍 개최
건설 노조	CPC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 펌프카 조직화 유인물 제작 및 배포(각 분회 매주 일요일 휴무 및 조직화선전전 진행) • 조직: 울산건설기계지부와 울산펌프카 분회가 울산지역레미콘 조직화 이뤄냄(현재 10개 공장 220여명 노동조합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펌프카 산업안전교육(3/22~23) • 투쟁: 부산 한국레미콘앞에서 일요휴무쟁취결의대회(4/15)
서비스 연맹	대형유통 할인점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2012년 전체 조합원 의무교육 시행 • 선전: 1,000인 플래시몹(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매주 집중선전전 실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백화점 명절 이틀휴무 촉구 퍼포먼스 (노조가입원서 포함 브로셔 제작/활용) • 정책: 특별법 추진 전국연석회의,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전략조직사업 간담회,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제정 및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 대형마트 규탄 합동기자회견 • 조직화: 백화점 판매직 노조 설립(650명)
화학 섬유 연맹	웅상지역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웅상전략조직화사업단 교육(웅상공단지역 유해물질 시료 분석결과 관련), 웅상노동조합협의회(발암물질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충남본부 공단전략조직화 워크숍 웅상사업 사례 발표 • 선전홍보: 공단선전전-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배포 • 정책: 건강권과 지역운동 관련 노동건강포럼, 경남도 '근로자건강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정 토론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지역사회 의제화를 위한 토론회(양산시의회), 발암물질없는 안전한 세척제 대체노력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모임(간담회) • 조직: K2코리아 노조 결성 및 유해물질 분석 지원, 파업투쟁 결합(진행중)
보건 의료 노조	예비노동자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보건의료학생 겨울캠프 평가회의 실시 • 찾아가는 학생캠프 진행 • 병원실습생 권리 찾기 사업 의제제발 및 여론화, 병원 실습생 교육권 신장방안 제도화 추진 • 전국 보건의료 학생협의체 구성 • 기타 - 부산대병원 조직화
서울 본부	은평지역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업종별 노동법 강좌, 대중 강좌 실시 • 선전: 선전팀 구성, 지역 노동인권센터 선전물 발간 • 조직: 업종별 조직화(4개) 추진(간병요양/병의원/유통서비스/지자체 비정규), 우리동네모임 조직사업 수련회, 건강소모임(근골계스트레칭교실 등)+문화소모임(영화, 책읽기) 개설, 노동인권센터 건립 추진(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추진과 결합), 은평지역 노동자 소모임 등 지역생활문화운동 • 상담: 전화상담+내방상담(상담사례집 발간 추진) • 조사: 지역 노동의제 토론회 실시(은평 노동실태 조사결과 보고,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와 과제), 민간위탁 실태 조사 및 구정 감시 옴부즈맨 활동 추진
경기 본부	반월시화 전략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공단실태조사 결과 및 사업단 사업 설명회(안산지부 대표자 수련회, 성림유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 • 선전: 권리찾기수첩 제작/배포, 최저임금 선전지 2회 제작/배

		포, 최저임금 페스티벌 개최, 최저임금 문화제 개최, 4~6월 최저임금 출근, 중식, 퇴근선전전 실시 • 조직: 현장활동가팀 구성, 의제별 공동투쟁사업단 출범 • 정책: 파견실태조사 분석, 기획투쟁의제 논의
경북 본부	중소영세 공단지역 전략조직화	• 선전: 지역 주요 공단지역(포항, 경주, 경산, 구미) 선전전 및 현수막게시(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교육: 전략조직 사업담당자 간담회 및 토론회, 진량공단 전략조직 사업담당자 및 추진단위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상담: 상담 방문자 및 전화 상담 진행, 상담자 기초자료에 대한 D/B 작업 진행 • 기타: 진량공단 전략조직화 사업추진 공간마련
금속 노조	공단지역 전략조직화	• 1지부 1전략공단사업 진행 중 • 지역지회전략조직화사업 진행(전략사업지회 선정/집중지원) • 완성차지부 중심으로 기업지부+지역지부 공동 미비사업 진행

※자료: 민주노총 2012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 반기평가보고서,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 4차 전체회의 및 5차 미비특위, 감사보고 자료.

2)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12년 상반기 미비기금 운용현황 (2012.1.1~6.30 현재)

내역	소요비용(원)	비고
이월금액	546,821,622	
2기 전략조직화사업	133,103,000	5개 사업 지원
이주노동자조직화	18,449,020	
전략조직화교육지원	3,563,720	미국 CTW 방한 교육워크숍
조직문화혁신실태연구	1,000,000	계약금
공단실태조사	6,212,500	-
단체기금	16,293,000	경향신문 희망텔레이기금
이자수입	6,502,620	-
기금잔액	406,349,002	

3) 가맹산하조직 '12년 상반기 전략조직화 사업비 집행현황

가맹산하조직	2012년 상반기				하반기사업비 (원)
	총사업비(원)	집행액(원)	미집행금액(원)	집행율(%)	
공공운수연맹	39,262,874	30,154,215	9,108,659	76.8	미 정
서울지역본부	29,142,759	22,064,674	7,084,981	75.7	
전국건설노조	38,219,574	11,204,818	27,016,474	-	
서비스연맹	46,559,589	7,984,670	32,023,443	-	
화학섬유연맹	35,306,289	6,817,230	28,489,059	-	
계	188,491,085	78,225,607	103,722,616	-	

4) '12년 상반기 조직화현황 (2011.1-2012.6월 현재)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명)	구분
공항지역 전략조직화사업	971	공공운수연맹
남부지역 전략조직화사업	220	서울지역본부
CPC 전략조직화사업	890	전국건설노조
대형유통·할인점 전략조직화	1,457	서비스연맹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	723	송출국 MOU 체결
학교비정규직 전략조직화	30,000	2011년 단기 전략지원사업
계	34,261	

5) 2012년 2기 전략조직화 상반기 사업 평가

(1) 주요 성과

〈총평가〉

- ① 예정대로 가맹조직과 지역본부가 수립한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압축선정/지원.
- ②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전반에 걸쳐 중소영세부문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자발적 사업계획 마련과 제안, 선정을 통한 전체의식 형성과 함께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혁신 사업 구체화.
- ③ 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의 경우, 유사업종과 부문을 묶고 정기회의 체계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단지역)조직화사업 흐름의 일관성 확보. 특히 금속노조가 추진하는 1지부 1공단 사업 등과도 연계함으로써 특정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조직적 관심 고양 및 집중사업으로 부각.
- ④ 전략조직화 대상 부문과 업종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업 진행, 이를 통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 세부 조직화 실천방안 수립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⑤ 총연맹이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사업위원회(또는 추진위원회) 집행체계 등에 결합하여 상호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었고, 전략조직화사업 연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공동의 사업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음.

〈단위평가〉

- ① 인천공항전략조직화사업을 통하여 간접고용노동자 문제를 여론화했고, 정규직화방안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높였으며,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투쟁을 계획할 수 있었음.
- ② 경남 웅상공단지역 발암물질 시료채취 분석 등을 통하여 유독성 화학물질(발암물질 포함)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등과 전국 최초 '발암물질없는 안전한 세척제 대체노력 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계기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③ 서비스부문 대형유통·할인점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사업을 통하여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입법의 당위성을 여론화하였으며,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 및 특별법 국회발의를 가시화하였음.
- ④ CPC 관련 전국거점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됐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유관업종(타설공, 레미콘 등)까지 조직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

(2) 주요 한계

- ① 미비기금 모금은 2009년 시점에 실질적으로 만료됐고, 목표액 미달하였으며 이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였음.
- ② 2기 전략조직화사업 기반 형성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자체 재정 및 인력확보에 있어서 조직별 편차 상존하고 총연맹이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지 못했음.
- ③ 지역본부의 경우 가맹조직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략조직화사업 전담조직 구축과 자체 재정 확보 등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할 적절한 방안 수립 부재.
- ④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경우 현장 조직화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산별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담아 낼 조직적 틀거리 구축 미진.

(3) 대안(하반기과제)

- ①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중간평가(조직문화혁신 실태 연구조사 결과 보고/토론 포함) 및 2기 전략조직화사업 이후 전망 조직 토론 진행과 신규 미조직·비정규기금 조성 추진
- ② 가맹산하조직들의 전략조직화사업 모범 성과사례 발굴 및 전국 공유
- ③ 지역사회 개입 적극화를 위한 지역의제 만들기과 공단지역 공동현안 발굴과 공동 대중투쟁 추진(지자체 및 대정부, 대국회 법제도 개선 및 조례제정 투쟁 병행)
- ⑤ 공항지역전략조직화사업 관련 인천공항 간접고용노동자 정규직화 투쟁 지원
- ⑥ 건설, 화물, 서비스 전략조직화사업 단위의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화와 조직단위 지원체계 구축
- ⑦ 이주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동가 활동기간 연장 추진

□참고 - 2011년 2기 전략조직화사업 성과와 한계 평가

1) 성과

- (1) 가맹산하조직의 전조직적 전략조직화사업 참여와 전국화
- (2) 총연맹-가맹산하조직-지역일반노조-지역단체-진보정당 등 다면적 연계사업 체계화
- (3) 가맹산하조직 미비특위/미비실 등 비정규조직단위 중심의 전략조직화사업단 고정화
- (4) 기업별 노조설립이 아닌 산별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개입 전략에 대한 고민 확산
- (5) 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에서의 전국 연계망 구축
- (6) 지자체-지방의회에의 개입을 통한 불합리한 노동정책-임금차별 해소(지역별 편차)

2) 한계

- (1) 일부단위 '집중조직화 목표대상 설정' 불투명
- (2)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사업 자체 재정분담율 저조
- (3) 사업전담자의 중복 업무 잔존
- (4) 정규직-비정규직을 관통하는 노동의제 발굴 지연
- (5) 실태조사 및 조직화사업 성과 편차 큼
- (6) 현장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한 현장초동주체 체계 구축 (일부)미진
- (7) 지역사회 노동시장 개입 전략방안 수립 미흡

5. 대안

△총연맹 차원의 전략조직화사업 중앙교육단 설치 △중소영세 미조직 비정규 정책연구와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사업장 단위 조직화 현장주체 발굴과 형성(직접 소통 강화) △금속노조 본조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공단조직화사업 전국 연계망 구체화 △유사부문 공동사업화와 공동사업의제제시(예: 산별최저임금투쟁 전략의제화 등) △산별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 개입전략안과 지역단위 전략조직화방안 마련(지역의제 개발과 지역투쟁주체 구축) △지역노동자 조직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가맹산하조직-지역노조와의 연계성 구체화 및 지역+부문별 조직화 경로 재구성 △중장기 인력과 예산확보방안 마련 및 선택과 집중 통한 전략조직화사업 강화 등.

6) 부대 사업현황

- 전략조직화 정책연구사업: 중소기업미조직비정규조직화 매뉴얼 및 공단지역 공동실태조사 결과집 발간 등
- 이주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 현지 송출국과 MOU체결 및 이주노동자 선발 및 현장 투입
- 학교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 2011년 단기 사업지원(2011년 총 1만5천여 명 조직)
-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 정기회의: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 전체회의(격월 개최)
- 전략조직화사업 평가위: 2기 전략조직화사업 반기 평가 및 평가의견서 제출

7) 2012년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추진계획 종합

(1)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항지역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조합원 교육 (30회) ○ 공항사람들과 함께 하는 열린강연회 (3회) ○ 조직활동가 학습모임 지원 (5개월) 	7~10월 7/9/11월 8~12월
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신문 발행 (6회) ○ 김포공항 소책자 지원 (3회) ○ 부문별 선전사업 지원 ○ 각종 선전물품 제작 (리플렛·기념품 등) 5,000개 ○ 서비스연맹 등과 공동집중선전전 진행 	7월~12월 격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조직화사업 진행(항공산업, 김포공항 간접고용/지상조업, 창고/인천공항 간접고용/화물운송) ○ 삶·바 캠페인 - 각종 무료상담(법률·건강·노동 등), 마라톤·체육대회·장기자랑 등 문화제, 증언대회 가입선언식, 지부 총력투쟁 결합 ○ 지역/부문별 조직 활동가 모임 (6개월×4단위) ○ 신규조직사업 (6개월×10명) 	9말10초 상시 상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2회) ○ 정규직화 방안 후속연구 ○ 법·제도 개선 요구안 관련 대국회, 대정부 사업 ○ 공항 유해물질 감시단 구성 및 운영 	9~12월 7~9월 7~12월 8~12월

	○ 인천공항 민영화 저지 공동대책위 구성	
상담	○ 인천공항 노동상담사업 진행 (6개월×2명) ○ 방문상담 (6월)	7~12월 7~12월
회의	○ 집행위원회 (6개월) ○ 기타 회의 (6개월)	7~12월 상시

(2) 서울지역본부 - 남부지역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선전	○ 사업단 자체 유인물 제작 (월1회*2,000부*6회) ○ 집중사업 유인물 (20,000부*2회) ○ 피켓·배너 등 기타선전물품 제작 ○ 선전·상담 현수막 (월1회*20개*6회) ○ 기타 현수막(시민강좌 등) ○ 광장사업(2회)	
조사	○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 업종별(청소·봉제 등) 실태조사	
정책	○ 각종 토론회 및 정책사업 ○ 초기업단위 조직화 사례 연구	
교육	○ 상담 교육 ○ 현장사업자 교육 및 토론 ○ 실천단 교육 ○ 노동안전 기획 교육 ○ 남부노동자시민열린강좌	
조직	○ 전략조직화사업 설명회(남부지역 사업장 순회), 토론회 ○ 초동모임/간담회 (4회) ○ 각종 소모임(3개) 지원 및 우편물 발송 등 ○ 지구협 및 현장 방문(간담회 등) ○ 노동부 대응 및 현장투쟁 ○ 법률상담	
회의	○ 대표자회의 ○ 전체회의 (15회) ○ 조직팀, 정책기획팀, 전략초안팀 등 각종 기획회의 ○ 사업단 전체수련회 (15명)	

(3) 건설연맹 - CPC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회의	○ 펌프카 전략기획단회의 및 지원팀회의 ○ 펌프카기사간담회 ○ 평가수련회	
정책	○ 제도개선정책사업 ○ 해외사례연구	
교육	○ 펌프카 산업안전교육	
선전	○ 현장선전전	
투쟁	○ 펌프카레미콘 일요휴무쟁취 결의대회	

(4) 서비스연맹 - 대형유통·할인점 비정규직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교육	o (정기선전전 후) 전략사업 추진현황 공유하기	
선전	o 선전물 제작 o 선전전(교통비, 식대, 피켓, 현수막 등) o 인터넷배너광고, 버스정류장 쉼터광고, 지하철 광고 등	
조직	o 지역 협업관계 구축 등 o 브로셔 발송	
정책	o 특별법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 운영 o 유통법 개정투쟁 연대	
여론조사	o 추석명절 대신민 여론조사	
기타	o 대규모 플래시몹 등 퍼포먼스 및 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5) 화학섬유연맹 - 웅상지역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세부내역	비고
정책	o (경남도)토론회 및 조례제정 공청회 (2~3회) o 실태조사 및 지역협약 추진 등 o (가칭)발암물질없는 노동현장과 지역사회만들기 조례제정	8월 9월 10월
교육	o 조직노동자 교육(웅상/양산지역 전조직 및 지역단체 대상) o 열린강좌(지역 중소기업장 미조직/지역주민)	4분기
선전 홍보	o 공단지역 정례 캠페인 o 선전홍보물(영상상영, 스티커설문, 판넬홍보물 전시 등) o 지역언론 및 생활지 광고 o 웅상지역 '공단신문' 발행	8~10월
조직	o 대중문화행사(웅상노동문화한마당) - 제2회 '웅상노동문화한마당', 문화행사(영화상영/마술공연/ 품물/댄스공연/발암물질없는 지역사회만들기 선언 서명 등) o 발암물질없는 지역사회만들기 선언대회 진행 o 공단사업팀 네트워크 활성화(영남권공단사업팀연계망구축) o 이주노동자 조직화(실태조사분석결과 토론회/간담회)	9월 하반기

(6) 보건의료노조 - 예비대학생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교육	-	
선전	o 병원실습생권리찾기사업 기자회견 o 병원실습생권리찾기사업 대담회	
조직	o 회의 o 실습생간담회 o 병원실습생권리찾기사업 간담회 및 토론회 o 행사(간담회·토론회·영화상영 등)	
정책	o 병원실습생권리찾기사업	
실태조사	-	
기타	-	

(7) 서울지역본부 - 은평지역 하반기 전략조직화사업

분야	내역	비고
운영	o 반상근 활동 (자체기금조달)	3분기
선전	o 유인물발행	
상담	o 노무상담/자원상담활동	
소모임	o 컴퓨터소모임/기타소모임/풍물소모임	
업종조직화	o 요양보호사모임/등지모임	

4. 2기 전략조직화사업 이후 전망 토론 요약

1) 사업대상과 기금조성

○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2010.11-2013.9)이후 기존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부문 조직화 기초를 계승하여 (가칭)3기 전략조직화사업(이하 '3기전략사업')으로 이어가고, 이와 관련한 전략조직화사업용 미조직비정규기금 신규 조성 추진.

2) 추진방안

- (1) 미비기금 신규조성
- (2) 사업(장)선정

3) 미비특별기금 미납사업장 처리방안

○ 가맹산하조직 미납 사업장 대상으로 미납 사유에 대한 정당성 확인 목적으로 미납 사유서 제출 요청하고 가맹조직의 경우 중앙이 미납 단위 사업장으로부터 사유서 접수 후 정리하여 총연맹에게 제출. 총연맹은 이를 미비특위와 전략조직화사업 전체회의, 총연맹 각급 의결단위에 '(처리)안'으로 제출함.

6. 소결

“노동조합운동의 지역사회 개입과 연대전략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전략조직화사업 주체들의 고민이 확산됐다.

2007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은 사업장을 기반으로 고용유지와 임금인상을 추구하는 기존의 기업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 지역문제와 산업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고 산업은 기업생존과 고용안정의 기반을 규정하기 때문이며, 특히 고용불안과 산업공동화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지역과 산업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사회연대전략 의제를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노동조합 운동 관점에서 지역사회 개입론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이에 대해 제3섹터 측은 “단위노조 틀로 사고하는 관성에서도 벗어나 지역사회라는 틀로 의제를 구성하고 정치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며 “어떤 의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욕구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조직화되지 않는 주민 포함)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지역 현지에 대한 실태조사, 욕구조사 등을 통해 주민 관심사 등을 파악하는데 이같은 과정 자체가 “지역과 연계를 맺고 지역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부분에 공무원노조나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 좋다.”며 “반드시 생활상의 구체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은 이념적인 대안이 아니라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제를 선택해야 하고, 지역적인 의제를 해결했을 때 그 성과를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지역개입론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조합 활동가(조합원)와 그 가족을 분리할 이유가 없고, 특히 해당 거주 지역 주민에 대한 내밀한 접근과 발전적 연계,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하 조직과 가맹조직 중앙에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체계에는 전략조직화사업 담당 주체인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사회 각계각층 연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입체적인 체계 형성을 통하여 지역현안을 모아내는 동시에 노동현안의 지역사회 여론화, 의제화가 병행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직 상태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급속히 증가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목적의식화 하고, 특히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직화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정 지역의 전략지역 선정이나 부문이나 업종에 대한 전략적 선택 방안 등에 대해 지역일꾼들의 심화토론과 계획수립, 사업전담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민주노총은 2기 전략조직화사업을 통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맹산하조직 단위들과 함께 전략조직화사업단 집행체계(총연맹+가맹산하조직+외곽조직)를 구축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활동 등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 중이다. 이 사업을 담당할 사업단위들 모두 전략조직화사업단(전략조직화사업위원회, 전략조직화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팀)을 구축하고 중소영세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2012년 진행 중인 전략조직화사업 성과를 살펴본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인천공항지역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천세관분회 고용승계 파업투쟁을 통하여 노동조합-원청-용역업체 3자가 교섭했고, 쟁점이었던 업체변경 후에도 고용승계, 임금보장 등을 쟁취했고 원청은 이후 용역업체 선정 시 이같은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첨부했다. 특히, 원청이 간접고용 문제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파급 효과는 크다. 특히 인천공항 노동자 대상의 신문(명칭: 우리도날자) 발행을 통하여 공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태를 집중 선전했고, 노동자 집결 토대 형성에 중요한 기제로 자리잡았다.

서울남부지역 전략조직화사업의 경우, 도시화된 아파트 공장형 구로공단(가산디지털단지)의 건물 특성과 함께 닭사육장같은 공간에 오밀조밀 뒤섞여 일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규모(평균

10인) 문제, 무수한 업종들의 분포, 낮 시간엔 이 지역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타 지역(거주지)로 이동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조직화 목표대상 설정이 쉽지 않다. 최근 관련 가맹조직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부문과 업종을 불문하고 전체를 조직화하는 방식과 조직편제 방식에 합의했다. 지역사회 개입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 전략조직화사업단은 CPC 사업을 통하여 전국 거점을 확보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타설공, 레미콘 등 유관업종을 조직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 8시간 노동, 일요휴무, 조출야간노동 금지 등의 현안을 내걸고 지속적인 현장 투쟁을 진행하면서 일정부분 성과를 얻자, 현장 유관업종들도 기꺼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유관업종으로의 조직화 확대는 현장 파급력 확대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서비스노조 전략조직화사업단은 백화점 판매직과 면세점, 대형유통할인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다. 특히 서서 일하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자보내기운동과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투쟁을 통하여 속속 조직화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할인점의 동네 장악과 재래시장 황폐화에 대응한 관련 상인조직들과의 연대를 통한 전국연석회의 체계를 구축했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법제도 개선이나 재정투쟁에 주력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 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은 전형적인 영세공단지역인 웅상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유독화학물질 검증 작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등을 확보했다. 이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에 발암물질 없는 지역만들기 조례 제정으로 가는 계기점이 됐고, 현재 대중사업을 진척시키는 동시에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도록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상의 (가칭)웅상공단신문 발행을 통하여 지역과의 접점 강화를 시도 중이다.

그밖에 가맹조직과 지역본부들 사이의 협력, 가맹조직-가맹조직 사이의 협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존재하던 조직들 사이의 일정한 갈등이 전략조직화사업을 통하여 축소되고 있음을 뜻한다. 조직들 사이의 과당경쟁보다는 일정한 협력과 협업, 연대를 통한 조직화사업 기풍이 일정부분 진척되고 있다.

덧붙여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노총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발제와 사례토론 등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승리혁신동맹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활동가를 방한시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과 비교하면서 자국에서의 조직활동 교육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관련 정보 교류와 공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가맹조직과 산하조직들 사이의 현실 조건(재정, 인력, 체계 등)에 있어서 편차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노동자 밀집도시 전략조직화, 특정 (미조직·비정규)업종 전략조직화 등의 사업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거나 착수 준비 상태에 있다. 이는 조직들 속에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기조와 방향에 따른 조직체계를 형성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한다. 총연맹도 이같은 일정한 흐름에 따라 2기 사업 종료 후를 전망하면서 보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토대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안을 수립 중이다. 2012년 8월 현재 심여 차례의 전망 토론을 통하여 2기 전략조직화사업 종료 시점인 2013년

9월 이후 가칭 3기 전략조직화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재 2기 사업 기조인 중소기업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사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대해 다수 조직이 논의하고 동의한 상태이다.

한편,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된 오늘 날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 주체들과 연대 단위들 사이에는 조직화 경로를 둘러싼 논의도 촉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정규직 원청 조직대오 관심과 함께 현장조직화 주체로서의 실천적 결합과 활동이 절실하다. 자본의 분할전략을 넘어 조직화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야만 한다.

전략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운동 차원에서 ‘산별단협효력 확장투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단협 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만 머물게 아니라 공동의 전략적 집중 실천 과제로 갖고 가야 한다. 민주노총 산별 체계의 안정화와 강화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가공할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는 기업별 노조라는 실리주의를 내세워 민주노총 산별 체계를 파탄내고 산별교섭 제도화 자체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사업 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연대체계 강화가 중심지점에 놓여있고, 비정규직(조합원)이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계를 넘어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런 내용들이 전략조직화사업 공동의제라는 형태로 수용되고, 가맹산하조직 단위 사업장과 지역현장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